



토론회

#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 2018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을 중심으로

2019. 1. 24(목) · 09:30-12:30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주최

정의당 이정미의원실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 주관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인천지부, 소수자인권위원회)

# 순서

## 인사말

국회의원 이정미

## 좌장

김지혜 교수 (강릉원주대학교 다문화학과 교수)

## 발제

### 1.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p. 3)

| 이해연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

### 2. 축제 참가자들의 증오범죄 피해와 공중보건적 함의 (p. 26)

| 주승섭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연구원)

### 3.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와 그 해악 (p. 38)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4. 증오범죄와 그에 대한 대응 (p. 47)

|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변호사)

## 토론

1. 장종인 /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p. 57)

2. 추지현 /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p. 61)

3. 강문민서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 (p. 65)

## 종합 토론 : 발표자 및 청중 토론

##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증오범죄

| 이해연 (인천퀴어문화축제 비상대책위원)

### 9월 8일 새벽 - 혐오세력의 철야 농성

조직위가 목격한 바에 따르면, 북광장 가운데 텐트 두동 치고 열명정도 사람들 줄서서 광장돌기 하고 있었다고 한다. 광장에 위치한 열린무대 점거도 계속되었다. 해당 사진들은 8일 새벽 2시 30분경 촬영된 사진이다. 해당 열린무대는 동구청에서 관리하는 곳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동구청에 신청이 필요한 장소였다.



<사진 01 - 혐오세력 집결 모습>



<사진 02, 03 - 텐트 설치 모습>

### 9월 8일 오전 6시 경 - 조직위 집결 시작

6시 경 조직위 중 일부가 처음 동인천역 북광장에 도착한다. 동인천역 북광장으로 이어지는 길목에는 대형 버스를 행사차량인양 무지개 플래그 현수막을 걸어 놓고 주차해 두었다. 당시 경찰과 조직위는 혐오세력의 철야예정을 대비해 집회신고 시간을 8일 00시부터 20시까지로 낸 상황이었다. 하지만 경찰이 새벽에 정리해주겠다는 약속과 달리 광장은 정리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었다.



<사진 04 - 당시 대형버스가 위장되어있던 모습>

또한 차량진입 및 주정차가 불가한 동인천역 북광장에 차를 세워 진입이 힘들게 하였으며 이미 상당 인원이 북광장에 집결해 있는 상황이었다. 북광장에는 이미 혐오집회의 불법 현수막이 다수 게시되어 있었다.



<사진 05, 06 - 불법 주정차 사진>



<사진 07 - 집결 상황>

6시 50분 가람 의경이 도착하였으며, 7시 10분 가람 조직위의 짐 트럭과 함께 조직위가 대부분 도착한다. 당시 경찰은 혐오세력 측 주최측과 연락을 시도 중이었다. 동구청은 불법 주정차 차량을 뺄 수 있는 견인차가 없다고 하여 불법 주정차 차량을 견인할 수 없다고 했다. 조직위의 트럭이 진입이 불가능하여 주변에 정차해둔 후 조끼와 무전기, 명찰 등만 패용한 채 움직일 수 밖에 없었다.

7시 30분 가람부터는 무대설치를 하기 위해 몸싸움이 시작되었다. 무대설치를 막는 인원은 200여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은 차량의 진입을 막는 것은 물론, 자재를 내리는 경우 온 몸으로 막으며 자해 협박을 했다.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경우에도 따라와 같은 행위를 반복하였다. 이후에는 주차해둔 행사 무대차량 앞뒤로 경차를 주차하여 차량의 운영을 봉쇄하였다. 당시 무대 업체는 다음 일정을 소화해야하는 상황이었다.



<사진 08 - 무대설치 대치상황>

당시 경찰은 조직위에게 지속적으로, “한 시간 뒤에 광장을 정리하겠다”, “곧 강제집행을 해 해산시킬 예정이다”라고 언급하였으나, 단 한 차례 청년들을 해산시켰을 뿐이었다. 광장 외부 조직위가 신고한 위치에 안전펜스를 설치하였으나 강제집행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안전펜스는 20대의 건장한 청년들에게는 그 어떤 장애물도 되지 않았다. 그들은 상황을 보기 위해 주변을 우회하고 있는 무대차량이 광장 주변으로 오면 안전펜스를 뛰어 넘어다니며 차량이 정차하는 것을 막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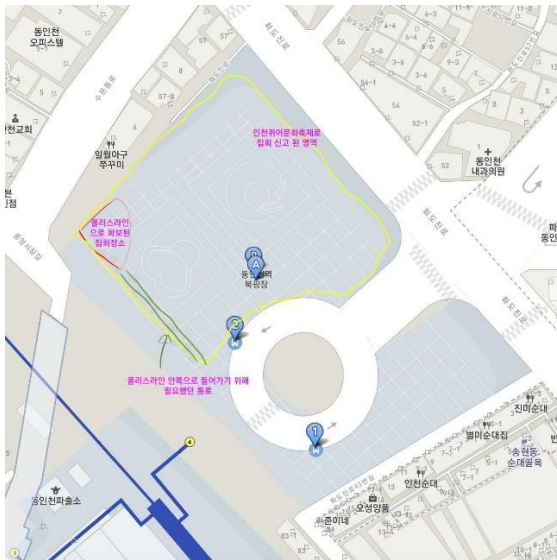
시간이 좀 더 지나자 부스를 신청하여 준비하러 온 인원과 자원활동가가 모이기 시작했다. 사람이 하나 둘 모이기 시작하자 혐오세력은 에워싸기 시작했다. 자원활동가와 부스 인원들은 혐오세력에게 둘러 쌓여 ‘집에가라’등과 같은 혐오발언에 그대로 노출되며 고립되어야 했다. 조금이라도 움직이려고 하면 혐오세력이 길을 막아섰다. 경찰에게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무대 설치를 위해 움직이고 있어 병력이 부족하다’라는 말을 반복하며 도움을 주지 않았다. 이런 상태로 자원활동가는 약 2-3시간 가량을 동인천역 4번 출구 앞 버스정류장에서 고립되어있었다.

자원활동가가 모이기 시작할 때 즈음, 경찰은 조직위원장을 불러내었고 이해연 공동조직위원장(이하 이 위원장)과 당일 경찰과 연락을 담당했던 모 위원과 함께 경찰과 만난다. 당시 경찰은 조직위에게 혐오세력이 무대설치를 하지 않을 경우 불법 주정차 차량을 빼고 인원이 옮겨가겠다고 했다고 혐오세력과 협의를 할 것을 종용하였다. 잠시 뒤 혐오세력과 이 위원장 및 조직위원, 변호사, 경찰이 모인 자리에서 혐오세력은 무대설치와 스피커사용을 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웠다. 당시 혐오세력이 주변에 분포해있는 곳에서 협상이 이루어져 주위로 혐오세력들이 모여 조직위에게 위협이 되는 상황이었으나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조직위는 해당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앞쪽에 인원이 물리게 하여 뒤쪽으로 진입하는 작전을 세웠으나 당시 유일하게 진입이 가능한 길목에 차를 불법 주정차하여 움직일 수 없게 하였다. 차량을 견인하려 하자 바퀴사이에 다리를 넣거나 차 지붕에 올라타는 등 견인이 불가능하게 하였다. 무대 및 음향차량은 결국 3시간정도 배회하다 철수하였다.

무대설치가 불가능해진 이후, 경찰측은 협상을 재시도 한다. 무대와 스피커를 설치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기존 협상을 받아들여야 한 것이었으나, 혐오세력은 이전에도 ‘부스 및 퍼레이드’도 하지 않는 것을 경찰측과 이야기 할 때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추가적인 조건을 붙였다. 이에 경찰은 아무런 해명이 없었다. 조직위는 이 안을 거부한다.

계속해서 기존에 신청한 광장이 점거가 되자, 경찰은 장소를 기존에 신청한 장소가 아닌 남서쪽 작은 광장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당시 광장에는 인원이 더 모여드는 상황이었고, 광장 쪽에는 인원이 비교적 적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확보가 비교적 수월했다.. 하지만 4번 출구 앞은 자원활동가와 부스 인원 및 참가자 분들도 모여 인원이 더 많아진 상황이었으며 여전히 움직이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또한 제안한 장소와 모인 장소가 꽤 멀어 제안을 거절하자, 이에 경찰이 4번 출구에서부터 집회장소까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줄 것을 제안한다. 경찰은 또한 장소 내부와 참가자들의 안전은 최대한 보장하겠다고 하며 호언장담하며 폴리스 라인을 쳐 집회공간을 마련하기 시작한다.



<사진 09 - 기존 집회신고 장소 및 변경 장소, 필요한 통로>

### 9월 8일 장소 변경 이후

하지만 참여자가 움직인지 20분여만에 통로가 막혔으며, 통로쪽에 생수를 전달하려던 승합차 또한 혐오세력에게 막혀 전달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좁은 통로에서는 경찰과 참여자, 혐오세력이 뒤엉켜 몸싸움이 계속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폭행을 당하거나 깃대가 부러지는 피해가 발생했다. 경찰은



통로쪽과는 별개로 해당 장소와 남부역이 연결되어 있는 새동인천 지하쇼핑센터의 입구를 혐오세력과 축제 참가자의 구분이 어렵다는 이유로 봉쇄하였다. 통로 쪽이 위험해지는 상황에서, 축제 개최선언이 있을 경우 경찰이 조금 더 용이하게 보호해줄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먼저 장소에 위치한 인원들은 개최선언을 준비한다. 미리 들어온 인원을 정리시켜 착석시키고, 확성기로 축제 개최선언을 한다.

개회선언을 한 이후 경찰측에서는 ‘혐오집회와 축제참가자의 구분 불가’를 이유로 참가자들을 지정된 장소에 들여보내주지 않았다. 들어올 수 없는 참가자들은 광장 주변을 배회하다 돌아가거나 자리를 잡고 앉았으나 곧 물려든 혐오세력의 혐오발언에 그대로 노출되다 돌아가는 일이 허다했다. 경찰은 외부의 대처상황에 도움을 준 적은 단 한번도 없다.

장소 안쪽의 상황도 비슷했다. 개회선언 이후 연대발언을 듣고 있던 중 혐오세력이 경찰을 뚫고 들어와 장소 일부에 스크럼을 짜고 앉았지만, 경찰은 병력의 부족과 스크럼을 들어내기 위험하다라는 이유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 이윽고 조직위의 반발이 심해지자 들어온 인원의 수장격으로 보이는 이에게 ‘안쪽에서 성기구를 판매하지 않을 것’, ‘음란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등을 조직위에서 약속했다며 ‘걱정하는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그러니 이제 나가라’며 설득했다. 이에 처음 들어온 혐오세력은 밖으로 나간다. 조직위는 물 약 50여병, 작은 앰프 1개와 큰 앰프 1개, 확성기 등만 가진 채 집회를 이어간다.

광장 밖에서 계속 대치가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미처 들어오지 못한 부스 한 단위가 밖에서 좌판을 깔기 시작한다. 이에 장소 안 쪽에서도 부스를 시작하기로 한다. 이때 다시 한 번 혐오세력이 장소 안쪽으로 들어온다. 부스를 깔던 인원은 잠시 중단한 채 혐오세력을 주시하기 시작한다. 이전에 들어온 인원과는 다른 인원으로 보였다. 경찰의 회유에도 꿈쩍도 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조직위는 어째서 저들을 끌어내지 않는지 물었고, 경찰은 다시 한 번 ‘반대집회 사람과 참여자의 구분이 어렵다’라는 말을 반복했다. 이에 조직위가 혐오세력의 인원과 축제 참여자를 약간의 틈을 가지고 분리하기 시작했고, 분리가 된 이후 경찰에게 알리자 앞쪽부터 끌어내기 위해 움직였다. 하지만 한 명이 경찰에 의해 분리되자 연좌하고 있던 인원이 모두 일어나 뒤쪽에 위치한 참여자 쪽으로 돌진했다. 조직위와 일부 인원이 몸으로 막으며 경찰에게 도움을 청했지만 경찰은 별 다른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방관하기만 했다. 돌진한 인원 중 일부가 참여자를 폭행하려고 해 경찰에게 고함을 지르며 상황을 알리자 경찰이 왔고, 혐오세력은 그 자리에 다시 앉는다. 그 이후 안쪽 혐오세력이 무단점거하던 장소는 정리되었지만 점심 반입조차 불가능한 상황이 이어졌다.

집회가 고립되어 있는 동안 13시 30분 경 퍼레이드 차량을 화평철교로 진입시킨다. 당시 화평철교 근처에는 조직위가 3명정도 위치한 상황이었으며, 곳곳에서는 혐오세력과 참여자간의 대치가 있었으나 경찰이 한 명도 있지 않아 계속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어 조직위가 나서 진정시키며 상황을 중재해야하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차량이 진입하자, 혐오세력이 차량쪽으로 돌진하게 된다. 당시 경찰과 이미 협의된 상황이었으나 진입로는 확보되지 않았다. 결국 화평철교 바로 아래에서 차량을

반대집회 사람들이 몇겹씩 에워싸기 시작했다. 차를 양 옆으로 밀고, 계속해서 구호를 외치는 등의 행위를 반복했다. 반대집회와 섞여있던 참여자들의 물건을 탈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차량쪽으로 도움을 주러 온 바람소리로 담근 술의 복과 장구, 징 등을 탈취하며 되찾아 오려 하자 악기를 몸에 걸 수 있게한 끈을 목에 걸어 당기지 못하게 하는 등 각종 자해 공갈이 넘쳐났다. 트럭이 도로 한 칸을 점거한 상황이었고, 굉장히 좁은 도로에 버스까지 많이 다니는 길이라 계속해서 위험한 상황이 연출되었다. 하지만 교통경찰은 도움을 주기는 커녕, 차선확보를 이유로 반대집회 인원을 더욱 안쪽으로 밀어낼 뿐이었다. 차량이 몇번이나 크게 휘청였고, 계속해서 대치가 이루어졌다. 대치가 계속되자 흥분한 참가자들은 바퀴 밑에 못이 박힌 각목을 대고 차를 흔들어 펑크를 내고,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물을 묻힌 손피켓으로 막으며 문을 잡아당기거나 두들기기도 했다. 차량에 탑승한 사회자와 조직위원을 꾸준히 위협했으며 노트북과 음향연결선을 탈취하려 하며 파손하였다. 대치중이던 연대단체의 회원 중 한 명은 어떤 할머니에 의해 팔 안쪽을 물려 멍이 들기도 했다. 물자마자 혐오집회 사람들이 가해자를 뒤쪽으로 빼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게 했다.



<사진 10 - 화평철교 공연차량 포위>



<사진 11 - 차량 파손 상황>



<사진 12 - 퍼레이드 차량 번호판 훼손>



<사진 13 - 차량 내부 물품 파손 상황>

처음 차량이 진입했던 당시 차량에 같이 있던 이 위원장은 상황이 계속 위험해져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들어주지 않자 장내에 있던 정보과와 경찰청 사람들에게 직접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차량에서 내려 장내 진입을 시도한다. 하지만 의경은 조직위원장이라는 설명과 차량쪽 상황이 위험하다라는 설명에도 길을 열어주지 않았다. 명백한 통행 방해였다. 의경들이 길을 터주지 않자, 안쪽에 상주하던 조직위원에게 정보과 사람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안쪽으로 들여보내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는 짧은 당시에 주위에 20-30명 가량의 혐오세력이 에워싸고 끊임없는 위협과 혐오발언을 쏟아냈다.

장 외의 상황은 아비규환이었다. 경찰이 지척에 있는 상황이었으나, 아무런 조치를 취할 의지가 없었다. 곳곳에서는 고함과 싸움이 빈번했다. 혐오세력은 조금만 사람이 모여도 에워싸고 끊임없는 욕설과 혐오표현을 쏟아냈다. 약 10여분 후, 안쪽에서 진입할 수 있게해주겠다고, 의경을 마주하고

안쪽에 정보과 형사, 조직위 2명 바깥쪽에 이 위원장이 위치한 채 진입을 시도한다. 위원장이 진입을 시도하자마자 혐오세력이 달려들어 팔과 머리, 옷 등을 잡아당기기 시작했고 손 등을 뿌리치고 난 이후에 안쪽 조직위원이 안아 들어 장 내로 옮겨졌다. 사실상 일반 참여자들이 진입을 시도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증명했다. 들어가 상황을 설명하자, 그 것은 교통경찰의 업무라며 자신들의 업무가 아님을 피력했다. 교통경찰은 도와주지도 않고 계속 밀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다, 차가 넘어져 사상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이니 조치를 취해달라는 요청에도 계속 시큰둥한 반응을 보이다 알겠더라는 말을 남겼다.

차량이 있는 곳에 이윽고 경찰이 투입되었으나 조직위원, 자원활동가, 축제 참가자들이 계속 폭력에 노출되었으나 아무런 조치없이 바라보기만 했으며 조직위의 개입 요청을 거부했다. 112에 몇차례 신고해도 경찰인원이 부족해 나갈 수 없다라는 말을 들을 뿐이었다. 퍼레이드 차량이 전혀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되어서야 사회자, 조직위를 보호해 축제 장소로 인도하였으며 차량을 견인했다.

장내에 있던 이 위원장에게 경찰측은 계속해서 축제를 일찍 끝내는 것이 어떤지 물었다. 상황이 위험하고, 경찰도 도와주기 어렵다는 말을 되풀이하며 심리적인 압박을 주려 했으나, 이 위원장은 강경하게 축제 강행을 밀어붙였다. 그러자 당일 경찰 연락을 담당했던 모 조직 위원에게 계속해서 종용을 하였으며 결국에는 경찰이 보는 앞에서 조직위원에게 이 위원장이 경찰의 말을 듣지조차 말아라 라는 이야기를 하고나서야 멈췄다. 이 때 조직위는 퍼레이드도 반드시 강행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퍼레이드 강행 소식을 듣고 연대단체들이 장 내외로 모이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동지들이 장외인 광장을 가로질러 집결을 위해 이동을 시작했다. 휠체어 이용자와 활동가, 축제 참여자 50여명을 중심으로 혐오세력이 둘러싸고 고립시키려 했다. 이때 장 외에 있던 조직위가 발견하여 활동가들과 이동로를 확보해 나갔으나 몸싸움은 지속되었다. 혐오세력은 계속해 휠체어를 밀거나 깃발 철수 요구, 축제 물품 탈취 등의 행위를 했다. 휠체어를 미는 과정에서 휠체어가 쓰러질뻔 하고, 휠체어 아래에 다리를 넣고서는 ‘휠체어가 자신을 치었다’라는 거짓말을 지어내기도 했다. 혐오세력은 당시에 있던 조직위에 “불쌍한 장애우를 앞세운다”라며 비난을 했으며, 당사자들이 “내가 원해서 여기에 나왔고 나도 동성애자”라고 했으나 들은채 하지 않았다. 휠체어가 광장을 빠져 나가고 난 이후에도 10여명의 축제참가자는 다시 혐오세력에게 가로막혔다. 혐오세력은 “한 번에 나가면 퍼레이드를 할테니 한 명씩 내보내겠다”라는 몽니를 부렸다. 축제 참여자들이 목살을 하고 연좌를 하고 시간이 지나자, 경찰이 두어명이 길을 터주었다. 두어명만 있어도 충분히 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던 것이다.

장 내에서는 퍼레이드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기존의 퍼레이드 코스 중 길이 좁은 곳이 있어 혐오세력이 막을 경우 퍼레이드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판단이 들어 경찰과 협의를 해 기존의 코스를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찰에서는 승낙을 했고, 조직위와 조직위를 돕기위해 와주신 몇 사람이

모여 간단히 퍼레이드에 대해 이야기했다. 조직위와 인원들은 화평철교가 좁다는 것을 인지하고, 뒤쪽으로 우회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야기 했으며, 경찰에도 이를 설명했다. 퍼레이드 시간이 다가오자 장 내에서는 퍼레이드를 곧 시작한다는 안내와 함께 장내를 정리했다.

집회 장소 안과 밖은 경찰과 혐오세력에 의해 철저히 단절 당했다. 화장실을 가고 싶다는 참여자들을 내보내 주지않아 계속해서 조직위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파다했다. 경찰에게 항의하여 두 세명씩 모으면 내보내 주겠다는 말을 했으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에는 묵인했다. 어떤 참여자는 월경중이라고 하자 증거를 보여달라며 생리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바깥 쪽에서는 혐오세력이 참여자들을 향해 온갖 성희롱과 추행을 일삼았다. ‘좃맛’을 보여준다며 오라고 하거나, ‘이년들이 좃맛을 못봐서 그렇다. 박혀봐야 정신을 차린다’ 등의 저열한 말을 일삼으며 엉덩이와 허벅지를 만지는 등의 추행도 계속 있었다. 혐오세력은 참여자들과 조직위를 향해 침을 뱉거나, 따귀를 때리는 등의 폭력도 서슴치 않았다. 위험한 상황에서도 장 외의 사람들은 고립되어 안전한 장 내로 진입할 수 없었다. 경찰이 완강하게 막아섰기 때문이다. 일부는 공황발작으로 힘들어하자 혐오세력이 ‘선심 쓰듯’ 안쪽으로 들여보내 줘 의료지원단의 판단 하에 구급차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지기도 했다.

## 9월 8일 퍼레이드 시작

조직위는 경찰과 퍼레이드 시간을 16시로 조정하였으나, 화평철교쪽 혐오세력을 정리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6시 30분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었다. 경찰에 몇번이나 언제 시작할 수 있을지 물었으나 인원이 많아 움직일 수 없다는 이야기만 반복했다.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막히고는 몇번이고 반복했고, 경찰은 어느쪽을 보호해야하는지 망각한 것인지 방패를 참여자 측으로 하기도 했다. 장 외에서는 위험한 상황이라는 말이 반복적으로 들리며 도움을 요청하였다. 이를 경찰에 알리며 도움을 청했으나, 경찰측에서는 곧 보내겠다, 하지만 인원이 설부르게 움직이면 경찰은 도움을 줄 수 없으니 움직이지 말아라라는 협박성 언행을 계속했다. 대처 당시 허인환 동구청장과 당시 인천경찰청장도 행진을 방문하였지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돌아갔다. 경찰청장을 대상으로 조직위가 항의를 했지만 이마저도 묵살된 채 돌아갔다. 기존에 논의한 뒤쪽으로 돌아가는 길목도 혐오세력에 의해 무단점거된 이후였다. 앞으로도 뒤로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처음 진입을 시도한 인도에 인원이 너무 많아 밀리지 않자 아래쪽 차도를 사용해 행진이 조금 전진했다. 하지만 이 마저도 화평철교 인근에서는 무용지물이 되었다. 좌회전하여 빠져나가는 길목에 혐오세력이 모두 연좌를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경찰 한 줄을 맞대고 혐오세력과 축제참여자들이 대치하고 있었다. 앞과 옆 혐오세력이 없는 곳은 없었다. 앞에서는 경찰의 무의미한 해산명령만이 공허하게 울려퍼지는 중이었다.

경찰은 이때도 이 위원장에게 여기서 퍼레이드를 멈추고, 해산집회를 할 것을 종용한다. 앞쪽의 연좌를 들어내는 것이 너무 위험해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똑같은 이야기만 반복했다. 조직위원회는 강경하게 퍼레이드 속행을 요구한다. 이미 무대, 부스, 축제 모두 성사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퍼레이드만이라도 성사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다. 경찰은 계속해서 위협함을 어필하며 끝내기를 바랐지만 조직위는 목살하고 강경하게 진행하는 것을 유지한다. 그러면서 장외의 인원이 위험하다, 경찰의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또 다시 병력이 적어서 움직일 수 없다, 저쪽이 움직이면 경찰이 분산되어 도와줄 수 없다. 위험해 지니 움직이지 않게해라 라는 협박성 멘트를 되풀이했다.

장 외에 있던 조직위는 배다리에서 준비하고 있던 축제 트럭의 진출을 준비하며 퍼레이드와 합류를 시도한다. 하지만 경찰은 차량의 진입로를 확보하지 않았고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 진출로를 막은 혐오세력을 방치했다. 혐오세력이 다시 한 번 차량 아래에 다리를 놓고, 바퀴에 펑크를 내고 차량의 배터리 선을 절단하고 장비를 계속해서 훼손하고 공연자들에게 위협을 가했으나 경찰은 어떠한 대처도 해주지 않았다. 혐오세력은 차량이 움직일 수 없는 상황임과, 공연자들이 하차한 것을 확인한 후에나 멈췄다. 바퀴를 수리하기위해 움직이던 차량은 다시 한 번 남광장 쪽에서 혐오세력에게 둘러싸여 펑크가 난 채 길 옆으로 주차했다. 교통경찰은 다시한 번 트럭이 교통을 막지 않도록 교통정리만 할 뿐이었다. 경찰에 지속적으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경찰은 해당사항은 교통경찰의 몫이라며 책임을 떠넘기고 묵인했다. 교통경찰은 자신들은 교통관할이라며, 교통과 관련된 것만 할 수 있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기 시작했다. 20시까지 혐오세력은 ‘축제가 해산하기로 했다’라는 말을 듣고 자진 철수하였다. 이 때 까지 경찰은 그 어떤 대처상황에 개입하지 않았다. 심지어 배다리에서 대기중인 참여자를 향해 술로 추정되는 오물을 뿌리며 욕을 하여, 참여자들이 음주운전이라며 경찰에게 이야기했지만 철저히 무시당할 뿐이었다. 반대집회 참여자들은 6시가되면 축제도 불법 집회가 되니 6시까지 움직일 수 없다고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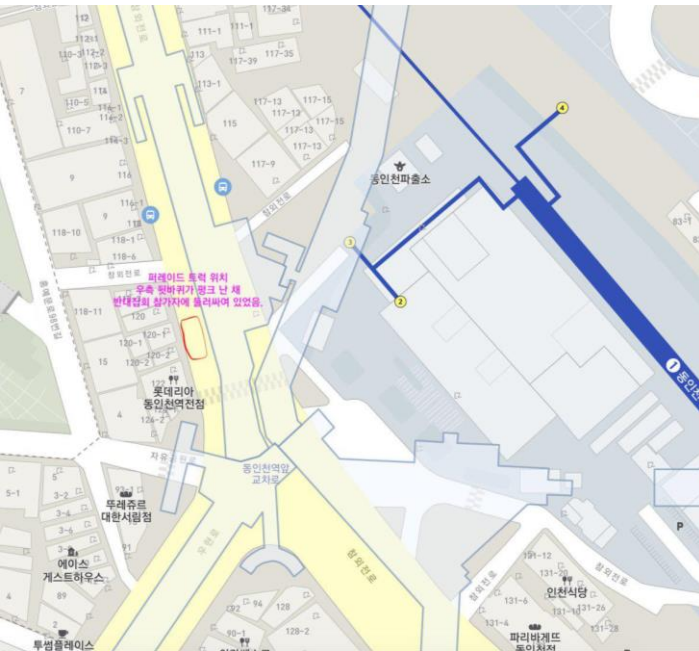
<사진 14 - 배다리 퍼레이드 차량 포위>



<사진 15 - 남광장 퍼레이드 차량 포위>



<사진 16 - 남광장 퍼레이드 차량 포위>



<사진 17 - 남광장 퍼레이드 차량 위치>

시간이 조금 지난 뒤, 화평철교 옆 인도를 밀어내고 지나갈 수 있게 한다고 경찰이 전했다. 굉장히 좁은 길이었지만, 경찰이 연좌를 들어낼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선택권이 없는 상태였다. 사람이 한 명 간신히 지나갈 수 있는 길이였다. 이마저도 앞쪽 조직위 포함 5명 정도 빠져나오자 막혀버렸다. 혐오세력이 참여자가 나오는 방향으로 들어가고 있음에도 경찰은 그 누구도 막지 않았다. 먼저 빠져나와 선두에 있던 이 위원장이 맨몸으로 이들을 막아내야 했다. 그러던 중 주변에 있던 대걸자루를 뽑아 휘두르려다 의경 두어명에게 저지당한 것이 끝이었다. 역주행 하여 나오는 쪽의 혐오세력을 왜 막지 않느냐는 조직위원의 항의에 경찰은 우리도 막고 있지 않냐며 샷대질을 하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같이 다니던 순경이 이를 제지해 데려가기 까지 조직위원을 향한 순경의 분노는 계속되었다. 혐오세력이 뒤엉켜 좁은 길 한 쪽의 공사장 펜스는 사람들의 밀어내는 힘을 버티지 못하고 계속해서 위태롭게 흔들렸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도움을 청했으나 경찰은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않았다. 가까스로 폴리스라인을 뚫고 나와도 인도와 차도를 나누는 작은 펜스 만을 가운데 두고 혐오세력과 축제참여자가 대치하는 상황이었다. 여기에 적은 경찰의 인원이 오기까지는 시간이 꽤 걸렸다.

폴리스라인에서는 계속해서 몸싸움이 벌어졌고, 계속 압박감을 느껴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참여자가 발생했다. 급히 구급차를 불렀지만 혐오세력이 구급차의 진입을 막아냈고, 이후에 실려나가자 박수를 치는 등의 인간으로서의 도리마저 저버린 행위를 지속했다. 앞쪽의 상황도 아비규환이었다. 폴리스라인에서 한 두명씩 빠져나와 50명가량이 좁은 인도에 서있었다. 앞쪽에는 이미 혐오집회 인원이 몰려든 상태였고 옆에도 혐오집회 사람들이 몰려든 상황이었다. 경찰은 분명히 앞쪽 퍼레이드를 위한 인도를 확보할 수 있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 앞쪽이 막혀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뒤쪽에서는 참여자들이 느리지만 한 명씩 빠져나오고 있었다. 계속해서 장소는 좁아져갔지만 경찰은 앞쪽의 인원을 정리할 생각이 없었다. 이 때 대열 선두에 있던 깃대를 누군가가 탈취한다. 깃발을 잡아 당겨 깃대를 가지고 간 이후에 깃대를 부러뜨려 참여자쪽으로 밀어냈다. 부러진 깃대의 날카로운 부분에 참여자가 부상을 입었으나, 움직일 수 없는 상황이라 대열에서 삼삼오오 전해주시는 밴드만이 치료의 방법이었다. 경찰은 깃대를 뺏으려는 행위는 저지하지 않고, 깃대를 되찾아오려는 참여자들의 움직임만을 저지했다. 혐오세력 중 일부는 참여자의 가슴을 쥐고 “여자가 남자 맛을 보지 않아서 레즈인 것이다라며 “내가 바로 이성애자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말을 서슴치 않고 뱉어냈다. 주변 인물들이 말리자 사진을 찍어 신상을 알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경찰이 계속해 아주 조금씩 한 두 명씩 앞쪽을 정리하던 중 20시가 되었다. 그러자 경찰의 해산을 공허히 외치던 차량의 안내문구가 바뀌었다. 분명히 불법 점거 중인 집회 참여자들은 해산하란 안내에서 모든 집회참여자로 바뀌었다. 이를 들은 조직위는 강하게 항의했으나, 경찰에서는 20시가 넘어서 더 이상 도움을 줄 수 없다. 여기서 집회를 해산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종용을 다시 한 번 한다. 당시 조직위에는 명백한 협박으로 들렸다. 앞과 옆은 혐오세력에게 막힌 상황에서 20시가 지나 곧 철수해야 한다는 말을 던지고서는 선택을 강요했다. 조직위는 다시 한 번 강경하게 퍼레이드 강행을 요구한다. 그러자 이번에는 중부서의 형사과 형사가 반대집회와 협상을 하자며 조직위에 다시 한 번 접촉을 해 왔다. 조직위는 이에 응해 경찰이 이끄는 곳으로 갔다. 혐오집회가 있던 앞 쪽으로



조직위 단 두 명을 데리고 갔다. 협상을 진행하던 와중에도 계속해서 혐오집회 인원들이 조직위원을 에워쌌다. 경찰에 강력히 항의하자 경찰은 두어번 대표만 남고 저쪽으로 가시라는 말을 외쳤다. 그들은 듣지 않았다.

혐오세력은 ‘깃대를 내리면 퍼레이드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며 깃대를 내릴 것을 종용하였다. 당시 조직위는 처음에 깃대는 내릴 수 없다 판단하고 고민을 하자, 경찰은 대신 깃대를 내리면 남광장까지 집회를 할 수 있게 하겠다. 참여자들의 안전은 보장하겠다라는 말과 함께 더 이상 경찰이 도와 줄 수 없다라는 심리적인 압박을 가했다. 사실상 퍼레이드는 합의의 대상이 아닌 허락의 대상으로 바뀐 상황이었다. 경찰은 계속해서 ‘깃대를 내릴 것’과 ‘인도로 행진할 것’을 조건으로 ‘남광장까지 집회를 허락하겠다’라는 뉘앙스를 풍겼다. 이미 참여자들이 많이 나온 상황이라 뒤쪽에서 참여자가 더 나온다면 참여인원이 밀려 위험한 상황이었고, 경찰을 한 줄 놓고 아슬아슬한 몸싸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조직위는 안전과 깃발을 선택해야하는 입장이 되었다. 혐오세력의 도남은 불법행위, 폭력, 폭언에 참여자를 노출할 것인지 굴복하고 안전을 택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했던 상황이었다. 당시 협상을 진행한 조직위는 무전을 통해 조직위의 의견을 청취한 후, 앞 쪽의 상황이 너무 위험하고 퍼레이드가 진행되면 남광장쪽에서 대치중이던 인원이 합류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협의사항을 받아들인다. 경찰은 다시 한 번 참여자들의 안전한 퍼레이드와 남광장에 도착해서는 깃대를 다시 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약속했다. 경찰을 믿고 퍼레이드를 진행하게 된 것이었다.

협상을 마치고 돌아온 조직위는 앞쪽에서 조직위를 도와주시던 분들에게 깃대를 내리는 선택을 하게되었으며, 경찰이 퍼레이드 경로를 터주겠다라는 말을 했다. 당시 협상을 했던 조직위원 중 한 명이 깃대를 내리는 것을 할 수 없겠다고 반복했으나 다시 한 번 조직위에게 의사를 물은 후 협상안대로 진행되었다. 경찰은 조직위에서 죄송하지만 깃대를 내려달라는 말을 할 시간을 주지 않고, 자신들이 먼저 확성기로 ‘축제 축에서 깃대를 내리자고 했다. 깃대를 내려라. 그래야 길을 열어줄 수 있다’라는 말을 선수쳤다. 조직위는 다시 한 번 참여자들에게 상황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경찰에 의해 빼앗겨 버렸다. 경찰은 혐오세력에게 경찰 확성기를 전해줘 혐오집회 사람들이 깃대를 내리라고 외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을 모자라 적극적으로 동참했다. 경찰에 강력하게 항의를 했지만 경찰은 다시 한 번 들은채 하지 않았다. 그 이후에 해당 확성기가 망가지자 축제 사람들이 망가뜨린 것이라며 말도 안되는 소리를 해 조직위에서 ‘그 사람은 혐오집회 사람이었고, 충분히 구분이 가능한 상황이었음에도 전해준 것은 경찰이다.’라며 경찰에게 강하게 항의를 했으나 그 것이 혐오집회 사람인 것을 알자 그저 아무말 하지 않고 지나갈 뿐이었다.

아비규환인 상황에서 퍼레이드가 시작되고, 경찰은 마지막 약속마저 지키지 않는다. 도로를 통제하겠다는 경찰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폴리스 라인마저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채 다시 한 번 혐오세력과 축제참여자는 뒤엉키게 되었다. 혐오세력은 새까맣게 인도를 점거한 채 참여자들을 향해 악을 쓰며, 욕설과 물리적 폭력을 쏟아냈다.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해주지 않았다. 혐오를 목격한 참여자가 과호흡에 쓰러진 상태였으나 인도 밖으로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처음 몇 명 서있던 의경은 과호흡 환자인 것을 설명하며, 상가 앞쪽의 작은 공간에 환자를 실 수 있게

해달라는 말을 묵인하다 정보과 형사가 와서 상황을 설명하고 나서야 환자를 뒤쪽 공간으로 옮겼다. 하지만 이마저도 곧 경찰의 폴리스라인이 뚫리고 위험천만한 공간으로 바뀌게 되었다. 깃대를 조금이라도 들려고 하면 혐오세력이 달려들어 깃대를 빼앗았고, 깃발을 찢어냈다. 앞쪽의 경찰의 이야기를 들었던 참여자들은 협상을 진행한 조직위의 양해와 함께 깃대를 내려 자신의 가방이나 몸 등 잘보이는 곳에 묶어냈다. 하지만 뒤쪽의 참여자들은 상황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으며, 경찰은 참여자들을 향해 그 어떤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저 혐오세력의 깃대를 내리라는 공허한 협박만이 화평철교를 메꾸었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들은 계속해서 폭력에 노출되어야만 했다. 폴리스라인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아 깃대를 조금만 들려고 해도, 작은 손 깃발 하나를 올리는 것에도 행진 대열이 막히게 되었다. 뒤쪽이 오지 못하는 것을 안 참여자들은 다시 돌아가 참여자들이 나올 때 까지 기다리고 함께 다시 퍼레이드를 하는 상황이 몇 번이고 반복되었다. 경찰은 마지막 까지 제대로된 폴리스라인을 마련하지 않았다. 참여자들은 우리가 여기있다는 구호만 물먹은 소리로 외칠 뿐이었다. 어렵게 마무리 집회를 하기로 한 동인천역 3번 출구, 남광장에 인원들이 하나 둘 모여들기 시작하자 남광장으로 진입하는 길목에 혐오세력이 서서 ‘집에가!’와 많은 구호들을 외쳐댔다. 이 때도 경찰은 어떠한 대처를 하지 않았다. 폴리스 라인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아 조직위와 활동가 몇이 줄처럼 보이게끔만 나뉜 상황이었다. 경찰이 해야 했던 모든 것들은 조직위의 몫이 되었다.

남광장에는 개별적으로 모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과 부스 참여단체, 연대단체, 축제 참가자, 인천 시민 약 300여명이 모여있었다. 길고 긴 대치 끝에 퍼레이드 대열이 합류하고, 광장의 일부를 폴리스 라인으로 봉쇄한 채 혐오세력을 마주보고 정리집회가 시작되었다. 곳곳에서는 오열하는 소리가 들렸고, 마무리집회를 진행하던 조직위원들은 서로를 끌어안고 울기 시작했다. 경찰은 혐오세력을 향해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며 인사를 건네기도 했다. 경찰에 항의를 했지만 무시당했다.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지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영원히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충분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참여 잊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힘들게 20분이면 올 길을 5시간을 걸어왔습니다.*

*여러분 이 참여 기억하며 연대하여 이겨냅시다. 감사합니다.”*

- 신우리 공동조직위원장의 마무리 집회 발언 중

참여자가 해산을 하고,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많은 이들에게 전하고 조직위원회는 짐이 있는 북광장으로 돌아간다. 해산하는 와중에도 혐오세력의 폭력은 계속되었다. 집에가려던 참여자를 따라가 귀에 대고 조용하고 빠른 목소리로 기도문을 속삭이거나 붙들고 혐오발언을 쏟아내기도 했다. 오전께 있었던 성희롱은 해산까지 계속되었으며 집에가려는 참여자의 통로를 막아서기도 했다. 뒷풀이를 위해 방문한 업소에서 참가자의 입장을 거부하기도 했다. 조직위원들은 모여 북광장으로 이동하자, 아직도 찬송을 하는 혐오세력 일부를 목격하였다. 그들은 이후에 보면대 등을 무단으로

투기하고 가기도 했으며 광장에 투기된 모든 쓰레기의 청소는 인천퀴퍼 조직위에서 고용한 업체가 시행했다. 하루 내 동구청의 열린 무대는 점거당한 채였다. 조직위는 정리 후 사무실로 향한다. 당시 인천퀴어문화축제는 무대와 음향, 부스 등의 그 어떠한 것도 할 수 없었다. 아래는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추산한 피해규모.

### 피해규모 추산

#### - 물적 피해규모 추산

항목	금액	산출근거
부스신청비 환급 비용	7,093,000원	부스신청비 입금 총액
예상 부스 후원 수입	14,800,000원	조직위 5,000,000원 부스참여 단체 49*2,000,000원
무대 및 부스, 행사용품비	9,000,000원	업체별 견적 합산
광장청소비	1,500,000원	
트럭 수리비	1,520,000원	트럭1           타이어           수리비 380,000원(공임8만) 트럭2 타이어 및 배터리선 수리비 75,000원 음향시스템 수리비 500,000원 차량 랩핑 600,000원
<b>합계</b>	<b>33,913,000원</b>	

#### - 신체적 피해규모 추산

항목	금액	산출근거
부사자 치료비	10,000,000원	필요 보상액
<b>합계</b>	<b>10,000,000원</b>	

#### - 정신적 피해규모 추산

항목	금액	산출근거
정신과적 상담 및 치료비	15,000,000원	50명(참가자 중 10%)*30만원
정신적 피해 보상	50,000,000원	500명*10만원
<b>합계</b>	<b>65,000,000원</b>	

**총액 : 108,913,000원(금 일억 팔백 구십 일만 삼천 원)**

인천퀴어문화축제 내 경찰은 혐오세력의 폭력을 방관하였으며 더 나아가 계속해서 행사의 종료를 종용하는 등이 방관을 일삼았다. 아래는 이 위원장과 경찰의 협상 테이블 정리 표.

행사 진행 특이 사항	회기	시간	협상 주제	협상 내용	승인여부
무대 설치 이전	1차 협상	오전 9시 ~ 10시 사이	경찰 - 혐오세력 - 인천퀴어문화축제 측	혐오세력 측, 불법점유물(무대, 스피커 등)을 제외하고 집회를 할 것 요구	불승인
무대 설치 결렬 이후	2차 협상	1차 이후 1시간 가량 후	경찰 - 혐오세력 - 인천퀴어문화축제 측	혐오세력 측, 불법점유물 및 퍼레이드 제외할 것 요구. 조직위측 1차에 퍼레이드 없었다고 하자, 혐오세력측 (경찰에게 전달할 때) 원래 있었다고 반박. 경찰측 해명 없음	불승인
	3차 협상	오후 12시~1시 사이	경찰 - 인천퀴어문화축제 측	중부서 정보과장, 기존의 장소(북광장 넓은 곳, 당시 혐오세력이 점거 중)에서 새동인천 지하상가 앞쪽으로 장소 변경 요구. 안전하게 이동해줄 것과 장소 지켜줄 것을 합의 한 후 장소 변경 확정.	승인
장소변경 및 개최선언 이후	4차 협상	장소 변경 이후 계속해 협상 요구	경찰 - 인천퀴어문화축제 측	중부서 정보과장, 안전문제를 빙미로 행사를 일찍 끝내줄 수 있는지 확인. 불승인. 조직위원장님이 불승인 하자 다른 조직위원과 협상 시도. 행사 중간 중간 계속해서 요청. 정확한 횟수 측정 불가능 할 만큼 계속해 협상 요구됨. 조직위 계속된 불승인	불승인
	5차 협상				
	6차 협상				
퍼레이드 시작 직전	7차 협상	오후 3시 전후	경찰 - 인천퀴어문화축제 측	퍼레이드 행진코스 관련 협상. 기존의 루트가 불가능 할 것이라는 경찰과 조직위의 판단으로 행진 루트 변경. 직진 후 유턴하는 코스로 변경.	승인
	8차 협상				
퍼레이드 대기 중	9차 협상	오후 6시 전후	경찰 - 인천퀴어문화축제 측	경찰측, 안전상 이유를 들며, 화평동 냉면거리 앞쪽까지 전진했으니 퍼레이드 마치고 마무리 집회 요구.	불승인
화평철교 아래 대기 중	10차 협상	오후 9시 전후	경찰 - 혐오세력 - 인천퀴어문화축제 측	경찰측(형사와 소속 경찰), 혐오세력이 깃발관련해 협상 진행하고 싶다고 함. 경찰을 뚫고 혐오세력이 대기 중인 곳으로 이해연 조직위원장과 최명석 조직위원을 데리고 가 협상 시도. 조직위원에대한 안전대책 없던 채 협상 시작. 혐오세력측, 깃발을 내리고 퍼레이드 진행할 것을 요구. 조직위 내부 논의 후 1차 합의. 이후 대열로 들어가 조직위원장 협상하지 않겠다 함. 조직위 내부 의사 다시 확인 깃발 내린 후 진행. 경찰 측 협상 시간 조직위에서 안내하기 전 확성기 반대세력측으로 넘겨 방송함. 퍼레이드 행렬 안전보장 안된 채 퍼레이드 시작.	일부 승인

### <사진 18 - 협상상황 타임테이블>

인천퀴어문화축제는 퀴어 역사상 전후무후한 끔찍하고도 잔악한 폭력사태로 남아야만 한다. 광장안팎에서는 "저것들 다 때려서 죽치고 집 보내버려야지" "(나를 가리키며) 에그머니 저렇게 머리 짧은데 가슴이 있네. 남자야 여자야?" "대체 어떤 애들이 동성애 하나 궁금해서 와 봤는데... 이상한 애들이네. (내 옆에 서 있던 레즈비언 커플 분들에게 손가락질하면서) 왜 여자애들 돌이서 안고 있대?" "인천에서 꺼져라 인천을 넘보지 마라! 인천은 안 된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동성애 축제를 이렇게 벌건 대낮에 연다니 음란하기도 해라ㄸㄸ" "우리 애들 물들면 안 된다. 항문섹스에서 보호하자!" "나는 정말 궁금해요. 왜 재네들이 동성애 하는지 모르겠어. 진짜 자리 마련해서 조곤조곤히 말해보고 싶어." "이렇게 난리 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하든가 말든가. 그건 상관 안 하는데, 이렇게 밖에서 소란 피우면 잡아들여야지" "대구에서는 3살, 5살짜리도 아스팔트 도로에 누웠던데 우리도 본 받아야 합니다" "동성애 허용하는 북한으로 보내라~! 북한으로 가라~!" "재네들 행진하러 빠져나올지도 모르니까 아주 겁겁이 싸야돼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현혹되었다", "너희 부모님은 너희가 이려고 다니는 거 아시니?" "동성애 하면 지옥 간다!" "부모님이 널 낳은 게 후회하겠다." "너희들이 태어난 거 자체가 재앙이다" "우리나라에서 떠나라" "십계명을 지금 여기고 있으니 자진해라" "소동과 고모라 같은 재앙이 저들에게 일어나게 하소서" 등의 혐오표현이 난무했으며, 참가자들에대한 물리적, 성적 폭력이 끊임없이 자행되었다.

[출처] 20180908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폭력피해조사결과, 고려대학교 김승섭교수연구팀

마지막으로 9월 8일 인천퀴어문화축제 공식 촬영자이신 최원석님의 글로 정리하겠다. 당시 원석님은 오전 일찍 도착해서 오전부터의 일을 상세히 기록해주셨다. 아래는 원석님 글 전문. 해당 글은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스토리펀딩인 하늘을 물들이는 사람들도 연재가 되었다.

[그날의 Time table]

06:30 AM

도착, 사람들 좀 있고 혐오세력 아저씨 아줌마들 와있음. 드문드문 어린 친구들도 보임. 책상 깔고 앉아있는 사람들이 집행부인가 생각하며 말을 걸러다가 나는 수줍으니까 안 검. 알고보니 거기 있던 사람들 중 퀴퍼사람물 한 명도 없었음.

07:00 AM

집행위 분 연락처 받고 만남. 무대는 오는 중이라고 하고, 경찰들도 와서 불법 집회 하시는 분들 처리해 주신 함. 멍청하게 앞으로 벌어질 일도 모르면서 무대 위치는 어떻게 되는지 물어보고 왔다갔다 하면서 담배피고 기다리고 하고 있었음.

07:30 AM

불법집회 참가자분들은 계속 앞에서 찬송가 부르고 자리깔고 눕고 하고 있고, 경찰들은 와서 보기만 하고 있음.

08:00 AM

경찰들이 얼마나 오랫동안 물러터져 있을지 궁금해서 타임랩스 촬영 시작. 길어야 이삼십분일거라 생각하고 있었음. 이때 시위진압차에서 “여러분들은 동인천역 북광장에 불법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옮기지 않으실 경우 견인 될 수 있습니다”를 요체로 하는 방송 시작.

09:30 AM

드디어! 경찰들 무대 집압시작. 이때만 해도 불법집회 참가자분들 달려가고 우리 시작할거라고 생각함. 11시 시작은 힘드려나 생각정도 함.

10:00 AM

무대가 막은 경찰들이 그냥 있음. 강 있음.

10:30 AM

합법 집회 참가자와 불법 집회 참가자들이 싸우기 시작.

10:45 AM

경찰들이 동인천역 지하상가 입구 앞에 자리를 만들어준다 하여 이동시작. 이 과정에서 경찰에게 심어져있는 나무를 휘두른 아저씨가 검거 될 뻔함. 실패! 아무튼 앞에 막고 있음.

11:00 AM

어든 경찰들이 만들어준 공간으로 합법 집회 참가자들이 대충 모임. 이 과정에서 낙오된 분들 좀 계심. 연대발언자들 발언 시작, 수화도 해주심.

이때 들어온 깃발 중 내가 아는 깃발들 목록 : 정의당 인천시당 성소수위, 앰네스티 국제인권단체, 트랜스해방전선, 인천대 성소수자 연대 포커스, 성소수자부모모임, 대학 성소수자 모임 연대 QUV, 퀴어영화팀,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 저스트페미니스트,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전주퀴어문화축제, 튜립연대, 연세대 중앙 성소수자동아리 컴투게더. 혹시 빠진 깃발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 영상 편집하며 보니 되게 열심히 찍어드린 단체 둘 빼먹음. 인권법률공동체 두런두런, 제주퀴어문화축제

-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는 왠지 제가 깃발은 못봄

11:30 AM

난입한 불법집회 참가자들 연좌농성.

11:35 AM

노래부르고 놀기 시작. 불법집회 참가자분들 둘러싸고 춤추고 노래부름. 이후부터 적당히 투닥거리는 사람들과 어든 모여서 사진찍고 노는분들 생김.

12:00 PM

처음부터 못봤지만 아마 밀고 들어오려던 불법집회 참가자분들이 있었는데. 어떻게든 밀어낸 듯. 그 와중 벽과 펜스 사이로 진입하던 불법집회 참가자 아저씨 들어오다 걸리고 도망. 어쨌든 노래하고 노는 분들도 계셨음.

12:10 PM

물카총 연호. 처음엔 정확하게 무슨일인지 몰랐는데 알고보니 바로 앞에 아파트 옥상 올라가서 니콘 400mm로 도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찍어둠. 그 옆사람도 폰카로 찍음. 사이드에서도 찍ㅇ,ㅁ.

12:20 PM

부스 참가자분들 지하상가 입구 앞에서 부스 차리기 시작. 그걸 본 연좌농성 하던 불법집회 참가자분들 난입. 어떻게든 저지 성공.

12:30 PM

부스 열림.

01:00 PM

동인천 북광장 한쪽 입구는 불법집회 참가자들이 유기한 버스로 막혀 있는데, 그 버스 뒤로 친구사이와 녹색당 깃발 보임. 이때 쯤 형사님 대동해서 밖에 나갔다 올 수 있다고 선언. 그때 녹색당과 친구사이 합법집회 참가자분들 경찰 저지선 통과할 뻔함.

어째서 이분들이 못 들어오셨냐 하면, 섞여서 불법집회 참가자 분들 들어오는게 경찰 입장에서 부담됐는 듯. 어쨌든 경찰들도 고생 중. 그러든 말든 어쨌든 좀 평화로웠던 시기. 노래도 부르고 춤도 추고 굿즈도 팔고 함.

01:20 PM

우리 앰프 살림.

01:30 PM

밖에서 못들어고 있는 중앙대 성소수자 동아리 깃발과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깃발, 범우주양성애자 모임 깃발 등을 깨달음. 몇 장 찍음. 이쪽 깃발들은 광장 중앙에 있었음. 버스쪽 돌아보니 '숙'이란 깃발이 버스 뒤로 보임.

03:00 PM

버스쪽에서 막혀있던 녹색당 깃발과 소련 깃발 들어옴. 범우주양성애 비밀결사단 깃발과 친구사이 깃발은 못들어옴. 친구사이는 뒤에서 막아줬던 애길 들은 것도 같음. 만들어준 공간 거의 꽉 참.

03:30 PM

노래틀고 공연팀으로 보이는 분들 몇 분 춤도 추고 다들 노래 부르고 놨.

04:00 PM

공연팀 중 몇 팀 동그랗게 모여 앉은 안쪽에 작은 무대에서 공연

04:30PM

행진 시작한다고 얘기 듣고 어떻게 경찰 통과해서 밖으로 나옴. 앞에서 움직이는걸 찍고 싶었음.

05:00 PM

밖에서 못 들어온 분들 "우리 여기 있다"고 외침. 안쪽에서도 호응. 어든 움직이다보니 경찰 병력 안에 MBC기자 아저씨랑 들어와있음. 한 삼사십미터 되는 골목을 불법집회 참가자분들이 차도와 인도를 점거하고 막고 있고 경찰은 밀다 실패 밀다 실패.

그리고 그 골목 맨 끝에 정의당 허들 깃발 보임. 반가워서 찍어줌. 이 당시 한 열댓걸음 움직인 상황. 좀 구경하다 어쨌든 기타치고 춤추고 찬송가 부르고 놀고 있음. 무지개 예수 분들이었음.

06:30 PM

도로를 점거한 불법집회 참가자분들께 노래 불러줌.

06:40 PM

열댓걸음 더 전진. 움직이니 신나서 소리지르고 구호외치고 했음. 앞에서 애국가 불러주는 분들이 계셔서 1절인지 2절인지 끝나고 우리가 2절인지 3절인지 불러줌.

07:15 PM

경찰이 열어준 길로 중앙대 성소수위 깃발과 인형탈 이동하다가 불법집회 참가자분들이 밀고 들어와서 고립됨. 인형탈 쓰신 분 다침. 호송이 된것 같음. 찍을 수 있었지만 도저히 찍을 수 없었음. 중앙대 성소수위 깃발이 사그러드는 모습이 안타까웠음. 조금 후 어떤 여성분 와서 움. 깃수 분이셨는듯.

07:30 PM

경찰과 합법집회 참가자분들 밀림. 도로와 인도를 점거한 불법집회 참가자분들 집에 가라고 연호. 우린 비켜야 간다고 말함.

07:40 PM

경찰 경고방송 시작. 내 평생 이만큼 닭장차 오는걸 보고 싶었던 때가 없음. 근데 도로를 점거한 불법집회 참가자분들이 연행과 채포 하라고 연호 하고 환호함.

07:45 PM

경찰이 길을 뚫음. 다리 밑까지 진출. 이 상황에서 우리 앞엔 도로와 인도를 점거한 불법집회 참가자분들이 여섯분쯤 계셨다고 함. 어쨌든 우린 안밀고 기다림. 그리고 다시 포위당함. 이때쯤 누가 깃발을 낚아챘다고 함. 보진 못했지만 일단 깃수들 벽으로 이동. 도로와 인도를 점거한 불법집회 참가자분들 깃발 내려 연호.

07:50 PM

앞길 다시 막힘.

08:10 PM

우리는 여기있다 연호 시작. 어디서 징도 공수해오심.



08:20 PM

깃발 내리면 길을 뚫어주기로 하고 큰 깃발 내림. 그리고 작은 깃발들 흔들며 이동. 곧 저지됨. 무지개 예수 깃발이 통짜라 내렸는데 내린것 같아 보이지 않는다. 깃발 내리라고절규중. "바로로 신부님이 나 기다리신다"는 외침이 우리쪽에서 들림. 도로를 점거한 불법집회 참가자분들 화냄. 깃발 뺏으려고, 깃대 뺏으려고 하는 사람들 있었음. "동성애자들의 특권으로 동구 아이들 인권 사각지대" 라는 현수막 코앞에 걸어둠. 우리 깃발 내렸으니 저쪽 현수막도 내려달라고 소리지름.

08:30 PM

작은 깃발들도 안 흔들기로 하고 행진 다시 시작. 그런데 이때까지는 어쨌든 경찰들이 우리와 불법집회 참가자분들 사이에서 막아줬었는데, 대충 이때부터 없어짐. 그리고 이때쯤 깃대가 긴 것에 시비를 거는 개개인들이 행진을 막으려 함. 조금 지체되다 양복입은 경찰 아저씨가 와서 깃발을 경찰이 보관해줄테니 주라고 하면서 뺏어가려함. (생략)

경찰의 보호 없이 불법집회 참가자분들의 사이로 걷기 시작함. 곧 모자 쓴 아저씨와 세명쯤 되는 다른 분들이 깃발 탈취 시도. 저지 성공. 이 아저씨 다시 다른 깃발 탈취 시도. 여성분이 놀라서 빠짐. 제가 깃발 잡고 그 아저씨 밟. 그러다 외곽 라인을 잡고 있던 경찰들에게 내가 잡힘. 경찰이 시위와 반대쪽 위치로 이동시켜줌. 뒤쪽에서 우리 당 분들이 소리질러줌. 잘 안들렸음. 시위 진행 방향으로 쪽 뛰다가 경찰 없는 곳에서 반대 사이드로 이동해서 다시 역주행. 당 아저씨들이 보고 싶었음. 안보임. 나뻐에 달려간건 아닌지 걱정함.

08:40 PM

경찰서 앞 주차장에서 앉아서 담배핥.

08:55 PM

동인천 파출소 앞에서 퍼레이드 진행 성공을 자축, 마무리 발언. 폐회. 415m, 쿼터 마일을 네시간 반동안 걸었고, 어쨌든 이동을 끝냄.

## 발 제 2.

# 축제 참가자들의 증오범죄 피해와 공중보건적 함의

| 주승섭 (고려대학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연구원)

# 축제 참가자들의 증오범죄 피해와 공중보건의적 함의

제 1 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 폭력 피해 조사를 바탕으로

연구팀: 김승섭 (책임 연구원), 이혜민, 이호림, 주승섭

발제: 주승섭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주승섭 (2018.09.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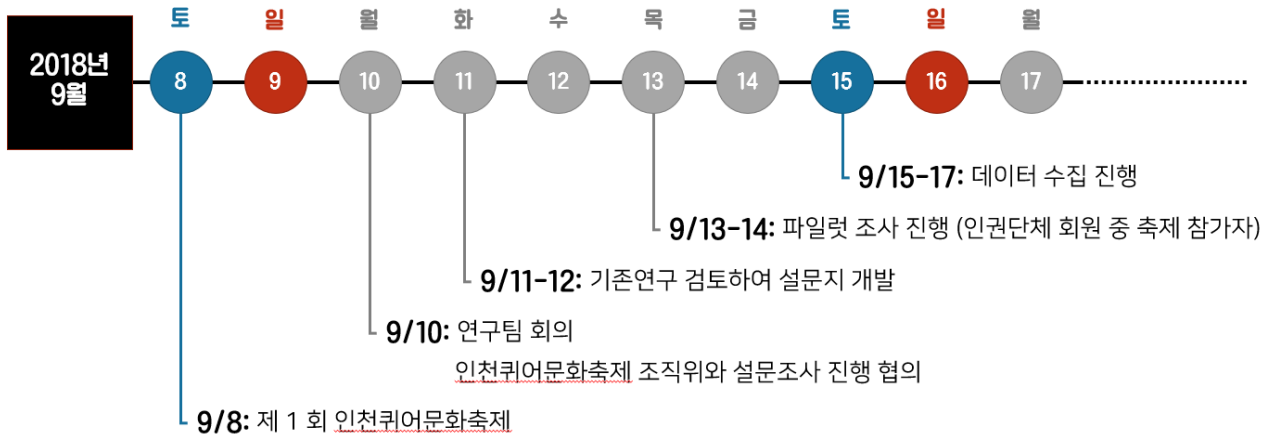
#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 폭력 피해 조사

**조사목적:**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참가자들이 겪었던 폭력 피해를 기록하고, 축제 참여 이후 참가자들의 정신건강 수준을 알아보고자 함

**조사기간:** 2018년 9월

**조사참여대상:** 2018년 9월 8일 동인천역 북광장에서 열린 제 1 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

##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 폭력 피해 조사 진행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 폭력 피해 조사 진행

자료 수집 기간: 2018년 9월 15일 (토) ~ 17일 (월)

자료 수집 방법: 온라인 조사, 인천퀴어문화축제 공식 SNS를 통해 참여자 모집

조사 참여자: 조사에 참여한 345명 중 피해 관련 객관식 항목에 모두 답변한 **305명**

**평가회 측 추산: 7-800명**

(제 1 회 인천퀴어문화축제 평가회)


**경찰 추산: 300명**

(한겨레, 2018.09.11)

조사에 참여한 **305명**은 축제 참가자 추산치의  
**40% 이상**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표 1.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의 인구학적 특성



	응답자 수 (명)	%
<b>성소수자 정체성</b>		
성소수자 당사자	254	83.3
비성소수자/ 앨라이	51	16.7
<b>연령</b>		
만 18세 이하	69	22.6
만 19세 이상 만 29세 이하	183	60.0
만 30세 이상	53	17.4
<b>사는 지역</b>		
인천광역시	109	35.7
서울특별시	99	32.5
경기도	68	22.3
그 외 지역	29	9.5
총 응답자 수	305	100.0

&lt;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gt;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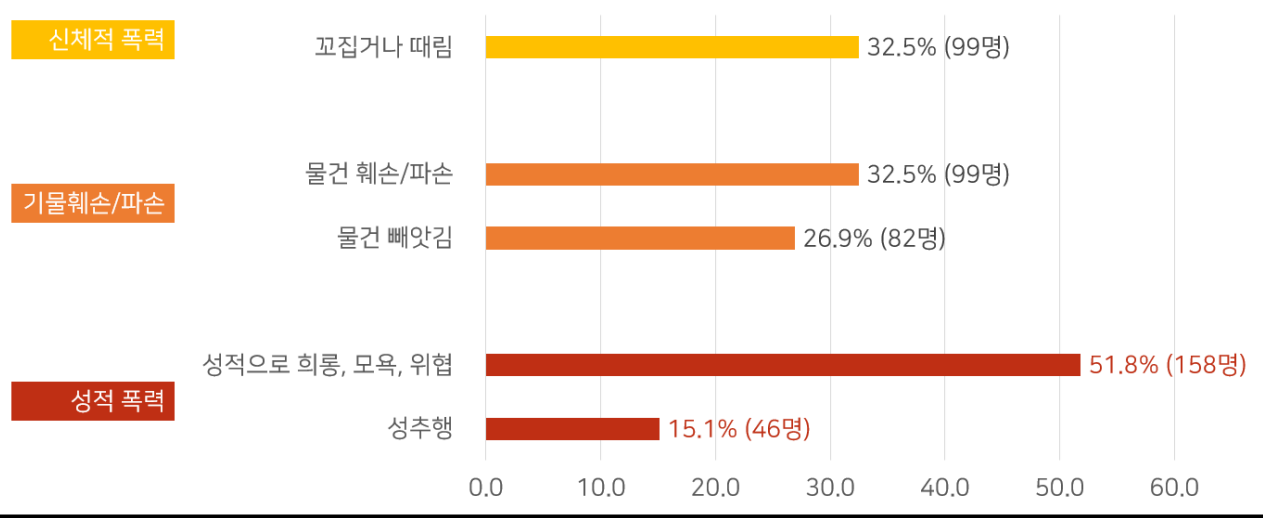
표 2.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반성소수자 세력에게서 겪은 피해 경험 (중복응답 가능, 총 참가자 수=305)



피해 경험의 종류	응답자 수 (명)	%
성소수자 비하 발언	298	97.7
욕설, 조롱, 비하	262	85.9
길 가로막힘	290	95.1
밀침	241	79.0
신체적 폭력에 대한 위협	222	72.8

&lt;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gt;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그래프 1. 제 1 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들이 반성소수자 세력에게서 겪은 신체적 폭력, 기물 파손/훼손, 그리고 성적 폭력의 빈도 (중복 응답 가능, 총 참가자 수=305)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  
**반대세력분들의 갑작스런 밀침으로** 인하여 경찰들과 그 분들 사이에 끼어  
**몇 십 분간의 가슴에 심한 압박을** 받았으며 이로 인해 당일 구급차를 타고  
 병원까지 갔었습니다.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길을 비켜달라는 말에도 반대세력분들은 저를 막아**  
**섰습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가 서술한 신체적 피해 사례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 제 가슴을 쥐고 "여자가 남자 맛을 안 봐서 레즈인거다" "나는 바로 이성 애자로 만들어 줄 수 있다"며 성희롱과 성추행을 했습니다. 주변사람들이 소리지르며 하지 말라고 하면 그들은 핸드폰을 들이대며 우리의 신상을 알리겠다고 협박했고 결국 행진을 계속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 경찰은 제지를 하지않았습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가 서술한 성희롱 피해 사례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표 3.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겪은 폭력의 책임이 누구에게 돌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참가자들의 인식 (총 참가자 수 = 305명, 중복 응답 가능)



책임의 주체	응답자 수 (명)	%
성소수자 혐오세력	302	99.0
인천동구청장	268	87.9
인천지방경찰청장	246	80.7
당시 현장의 경찰인력	214	70.2
인천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	13	4.3
기타	14	4.6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 참가자의 정신건강



# 우울증상 & 트라우마

(CES-D11)      급성스트레스장애척도 (ASDS)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 CES-D 11 (우울척도)



- 지난 1주일 간의 우울증상 측정, 한국복지패널조사에서 사용 중
- 총 11 문항, 4점 리커트 척도 (0~3점)
  - 원점수(raw score)에 20/11을 곱하여 CES-D 20의 준거점수를 따른다.
  - 즉 총점 60점 (=33x20/11) 을 기준으로 한다.

**우울증상 있음: 총점 60중 16점 이상**

- 문항 예:
  - 사람들이 나를 싫어하는 것 같았다
  - 잠을 설쳤다 (잠을 잘 이루지 못 했다)
  - 모든 일들이 힘들게 느껴졌다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 ASDS (급성스트레스장애척도)



- 사건 이후 가지게 된 급성스트레스성 증상의 정도의 측정
- 총 19 문항, 5점 리커트 척도 (1~5점), 총점 95점
- 소척도:

해리성 증상: '사건' 동안 또는 후에, 자신 주변의 일들이 현실적이지 않거나 마치 꿈같이 느껴진 적이 있습니까?

비해리성 증상: '사건' 관련해서 안 좋은 꿈이나 악몽을 꾸 적이 있습니까?

'사건'과 같은 일들이 다시 일어날 것만 같은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급성 스트레스 증상**: 해리 (총점 25점 중 **9점 이상**) & 비해리 (총점 70점 중 **28점 이상**)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측**: 총점 95점 중 **56점 이상**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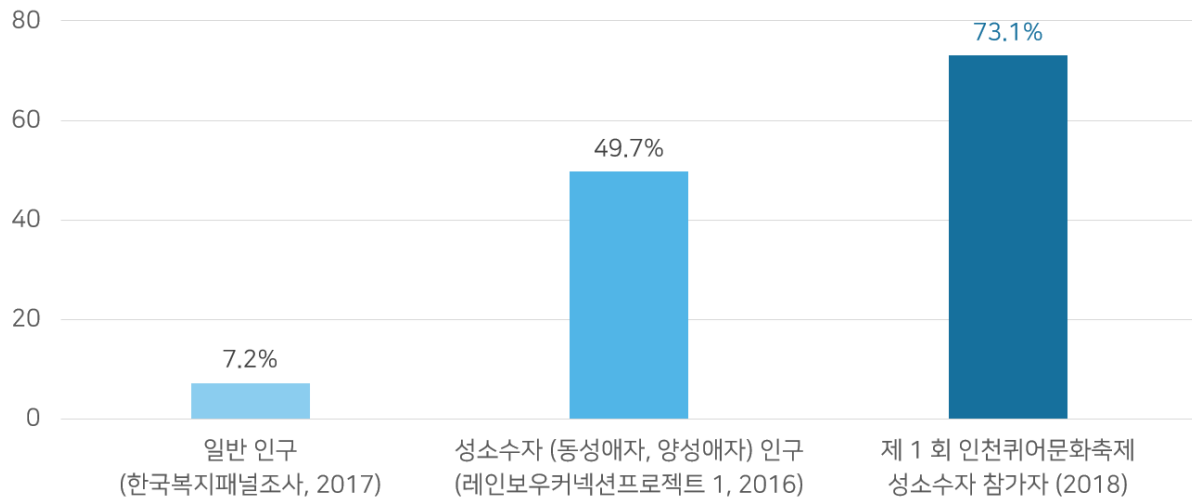
표 3. 정신질환관련 증상을 가진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의 빈도



정신질환관련 증상 (결측치를 제거한 총 응답자 수)	해당 응답자 수 (명)	%
우울증상 있음 (295명)	210	71.2
급성 스트레스 증상 (287명)	257	89.5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예측 (287명)	202	70.4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그래프 2. 만 19세 - 만 29세 일반 인구 성소수자 인구,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성소수자 참가자의 우울증 상 유병률의 비교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축제 이후 5일 동안 술을 많이 마시고 잠에 들었고, **악몽**에 시달렸다.  
**마음 속에 화가** 나고 **독이 가득하다**. 분노감이 일상에 계속 있다.  
**무기력**해서 밥을 제대로 **챙겨먹지 못**했고, 계속 술을 마시고 싶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가 서술한 축제 이후의 후유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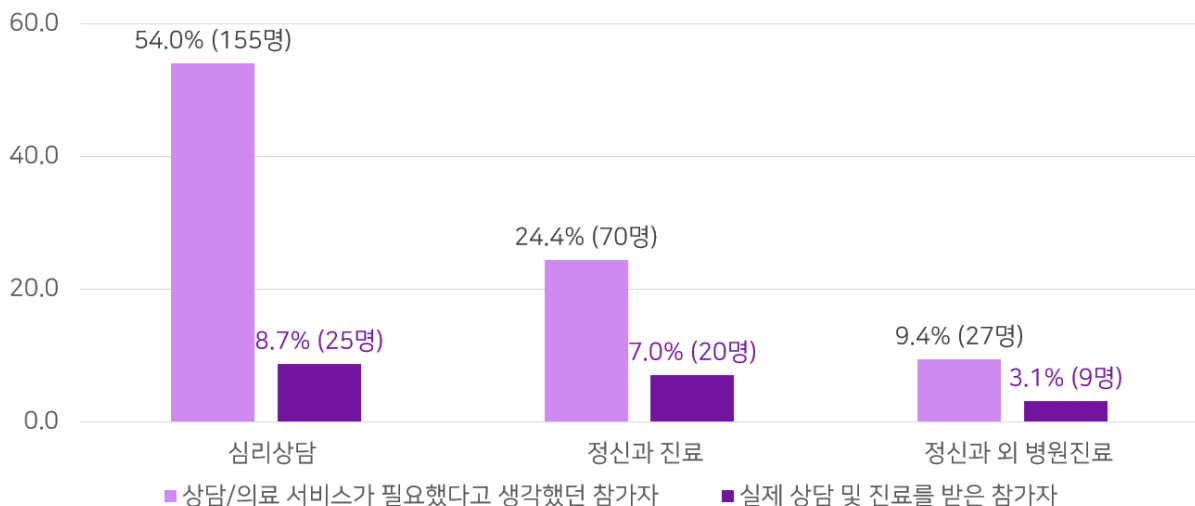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폭력적인 장면이 계속해서 떠올랐고, 기억을 회상할 때마다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갈 때 숨이 막히고 가슴이 답답한 증상이 생겼습니다. 식욕이 상당히 감소되었습니다. 모든 소리에 예민해졌습니다. 시끄러운 곳에 있으면 생각이 마구 엉키다가 정신이 멍해지고 현실감이 없어졌습니다.**”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가 서술한 축제 이후의 후유증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그래프 3. 제 1 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이후 상담/의료 서비스가 필요했다고 생각했던 참가자의 비율과 실제 상담 및 진료를 받은 참가자의 비율 (해당 문항 총 응답자 수 = 287명)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 연구의 함의



- 퀴어문화축제에서 경험하는 반성소수자 세력으로부터의 폭력 피해의 실태와 이러한 경험이후 축제 참여자의 정신건강 수준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
  -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상황이 다른 퀴어문화축제에서의 상황에 비해 심각했었다는 특수성이 있으나,
  - 퀴어문화축제에서의 반성소수자 세력과의 대치 및 충돌 등은 그동안 퀴어문화축제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해왔으나 이에 대한 체계적 조사는 이루어진 바 없음.

<한국사회 증오범죄 진단과 대안> 국회 토론회 |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 2019.01.24

소수자가 건강한 사회는  
모두가 건강하다.

오랫한 당신, 2017

##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와 그 해악**

**| 이종걸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집행위원)**

## 1. 들어가며

- 본 발표는 한 집단의 특성을 기반으로 그 집단의 증오, 편견, 혐오를 기반으로 하여 발생하는 범죄를 뜻하는 증오범죄/혐오범죄 중 특히 성소수자의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기인한 증오/혐오범죄의 해외 사례와 국내 사례를 알아보고, 이에 대한 해악을 진단하며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 2. 성소수자 증오범죄 - 해외사례

### 1) 매튜 셰퍼드 살인 사건

1998년 10월 6일, 미국 와이오밍 대학교의 남성 동성애자 매튜 셰퍼드가 잔혹하게 공격당한 동성애 증오 범죄 사건이 있었다. 셰퍼드는 구타와 고문을 당하고 와이오밍 주 라라미 외곽 울타리에 묶인 채 버려졌다. 셰퍼드는 22번째 생일을 50일 앞둔 1998년 10월 12일에 사망했다. 이 살인사건으로 인해 미국과 여러 나라들은 증오범죄를 처벌하는 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기 시작했다. 당시 한국에서도 이 사건은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었고,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의 중요한 사례로서 인식되었다. 2009년 10월 미국 의회는 매튜 셰퍼드와 인종 증오범죄의 피해자 제임스 버드 주니어의 이름을 딴 증오범죄예방법안《Matthew Shepard and James Byrd, Jr. Hate Crimes Prevention Act》을 제정하여, 10월 28일 미국 대통령 버락 오바마의 서명을 받아 발효되었다.<sup>1</sup>

### 2) 2016년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

2016년 올랜도 나이트클럽 총기 난사 사건은 2016년 6월 12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의 펄스(Pulse)라는 게이 클럽에서 발생한 총기 난사 사건이다. 최소 50명이 숨지고 53명이 부상당하였다. 이 사건은 2017년 라스베이거스 스트립 총기 난사 사건 이전까지 단일 총기범에 의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총기 난사 사건이자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 사건이다. 2016년 6월 11일 플로리다 올랜도에 소재한 게이 나이트클럽 펄스는 히스패닉계 손님들을 위한 라티노의 밤 이벤트를 열고 있었다. 이 사건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추모식이 열렸다. 한국에서도 서울 부산 등에서 추모를 위한 촛불문화제가 열렸다. 이 사건은 동성애자들의 해방구로서 존재하는 게이 클럽을 표적한 사건이었다.

미국 내 게이클럽을 노린 공격의 역사는 1973년 뉴올리언스 게이바 '업스테어 라운지' 방화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32명이 숨졌지만 범인은 결국 잡히지 않았고, 일부 교회는 희생자들을 매장하는 것조차 거부했다. 당시 화재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아서 램버트는 2013년 인터뷰에서 이 사건에 대해 "끔찍했다"며 "그들은 말 그대로 산채로 불탔다"고 증언했다. 1997년 애틀랜타의 레즈비언바 '어더사

---

<sup>1</sup> "Obama signs hate-crimes law rooted in crimes of 1998". 《USA Today》. 2009년 10월 28일.

이드 라운지'에서는 폭탄이 터져 5명이 부상했다.이 사건은 1996년 애틀랜타 올림픽 경기장 등에서 폭탄을 터뜨린 극우파 에릭 루돌프의 소행이었다.<sup>2</sup>

이 사건은 증오범죄의 표적집단이 자주 빈번하게 집단적으로 활동하는 곳, 표적집단의 커뮤니티가 형성된 곳에서 증오범죄가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면서, 이로 인한 피해가 극심한 것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에서 성소수자에 대한 증오범죄가 발생할 수 있을 조건, 경향에 대한 예시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 올랜도 총기난사 사건을 추모하기 위한 포스터, 제작: 전나환 작가>

### 3) 2017년 체첸의 남성동성애자 구타와 전기고문 자행

미국 CNN방송은 2017년 4월 14일 게이 남성에게 구타와 전기고문을 자행한 러시아 체첸 자치공화국의 게이수용소 존재가 알려지면서 전 세계의 공분을 사고 있다고 보도했다. 수용소에서 탈출한 아담(가명)은 지난 13일 영국 일간 가디언에 "최소 하루 한 번 전기고문을 당했다"며 "소리를 지르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면, 다른 고문자가 들어와 각목과 금속 막대기로 마구 때렸다"고 증언했다. 아담은 오래 알고 지낸 게이 친구의 전화를 받고 만나러 나갔다가 수용소로 끌려갔다.<sup>3</sup>

게이수용소의 존재를 처음 보도한 러시아 반정부 성향의 일간지 노바야 가제타는 최소 게이 남성 3명이 사망했다는 증거가 있으며, 사실상 더 많은 희생자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슬람 종교 영향 아래에서 체첸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국가가 성적지향을 이유로 게이 남성을 구금하고, 조사하는 등의 인권침해는 비단 해외에서만 사건이 아니다. 2017년 육군은 수사라는 이름으로 동성

<sup>2</sup> '동성애자 해방구' 역할 하던 게이클럽...과거에도 증오범죄 표적, 노컷뉴스, 2016년 6월 14일

<sup>3</sup> "구타부터 전기고문까지...체첸 '게이수용소' 실태에 전세계 공분", 매일경제, 2017년 4월 15일



애자 군인을 반강제 휴대전화 포렌식(forensic) 등을 통해 색출하는 인권침해가 진행되었다.

### 3. 한국 성소수자 증오 범죄 사례 - 언론보도 중심으로

2011년 11월 남성동성애자 커뮤니티 밀집지역인 종로에서는 동성애자를 노린 집단 연쇄 폭행 사건이 발생하였다. 피해자 A씨는 “애인과 종로 골목길을 걷는데 갑자기 세 명의 남성이 다가와 ‘게이xx들’이라고 욕하며 때렸다”며 “일방적으로 맞아 얼굴에 온통 피멍이 들었다”고 하소연했다. 다른 피해자 B씨 역시 애인과 함께 종로5가 골목을 걷다가 맞은편에서 달려온 3명의 남성에게 폭행을 당했다. 한 명이 망을 보는 사이 키 180cm 이상의 건장한 남성 두 명이 달려들어 무차별로 때렸으며, 이들은 주변에서 인기척이 들려오자 서로 신호를 보내 함께 도망쳤다. 같은 날 새벽 또 다른 20대 동성애자 한 명도 인근에서 불상의 남성 두 명으로부터 두들겨 맞았다. 그러나 경찰에 신고된 건수는 단 한 건이었다. ([단독]호모포비아… “이런 게이xx들” 문지마 폭행, 동아일보, 2011년 11월 8일 )

2012년 4월 서울 남산 일대에서 성매매 호객행위를 하는 성전환자 여성만을 골라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아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10대 폭주족들이 남성의 목소리에 여성스러운 행동과 말투를 쓰는 트랜스젠더들을 우습게 여겨 재미삼아 폭행했다는 진술을 하기도 했다”며 “일반적으로 돈을 노린 범행의 경우 집단 폭행 대신 빠른 시간 내 금품을 강탈하는 게 특징이지만 이번 사건은 혐오자에 대한 분노가 표출돼 폭행 수위가 높았다”고 평가하였다. (트랜스젠더만 노렸다… 10대 폭주족 '증오 범죄', 한국일보, 2012년 4월 30일)

새학기 대학가에서 성소수자 동아리가 내건 현수막이 훼손되는 일이 잇따라 발생했다.

서울대 총학생회 등에 따르면 교내 성소수자모임 '큐이즈'(QIS·Queer In SNU)가 학내에 내건 플래카드가 22일 오전 훼손된 채 발견됐다. 이 플래카드는 서울대에 입학한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신입생을 환영한다는 내용으로 15일부터 학내 도로변에 걸려 있었다. 총학생회는 전날 자정 전후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6년 3월 23일 연합뉴스)



<2016년 3월 22일 현수막 사진 -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IS 제공>



< 2016년 3월 23일 훼손된 현수막 사진 -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IS 제공>

# 함께 힘을 모읍시다!!

## 동성애 혐오범죄 해결 지원 및 신고, 대처 요령

### 1. 동성애 혐오 범죄 해결을 지원합니다.

얼마전 총로 3가 돈화문로 입대 동성애자를 대상으로 하는 혐오범죄가 발생했습니다. 혐오범죄란 "혐오주체가 특정 집단에 대한 편견이나 혐오, 비하, 적대감, 증오 등을 동기로 혐오의 대상이 되는 자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정신에 대해 치명적인 상처를 가하거나 물건이나 주택 등에 피해를 입히는 등의 범죄"를 말합니다.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 지난 10월 29일, 11월 5일 새벽에 있었던 사건은 3명의 남성이 게이 커플의 얼굴에 폭행을 가한 사건입니다. 이와 유사한 경험을 당하셨거나 이를 목격한 하신 분들은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02-745-7942, chingu@chingusai.net)나 기타 성소수자 인권단체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2. 동성애 혐오 범죄에 대한 신고 및 대처 요령

1) 우선 경찰(112)에 신고합니다. - 아웃팅 열려로 인해 신고를 주저하실 수도 있지만, 경찰은 수사단계나 그 이후에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유출할 수 없고 유출할 경우 이에 대한 제재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아웃팅의 위험은 본인의 의지에 따라 충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후 같은 범죄 예방차원에서라도 경찰 신고는 우선시 됩니다.

2) 최대한 많은 증거를 확보합니다. - 당황스럽고 힘들겠지만 가해자 검거나 처벌을 위해서는 침착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증거를 수집하고, 가능하다면 주위 목격자를 확보하며, 사건 당시 또는 직후에 녹음, 사진, 영상 등의 기록을 남길 수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동성애자 인권단체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 재발 방지 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입은 피해자의 정신적 외상에 대한 정서적 지지, 자긍심 회복 등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동성애자 인권단체에 알리고 공유하는 것이 좋습니다. 친구사이는 이와 같은 도움을 요청받을 경우 최대한 빨리 지원할 것이며 이후 법률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드릴 것입니다.



I. 모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 소중한 존재이며 누구도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혐오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II. 혐오 범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우리 동성애자들/성소수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사건 발생시 신고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등에 연락하여 지원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 <http://chingusai.net> | [chingu@chingusai.net](mailto:chingu@chingusai.net)  
TEL 02.745.7942 | FAX 02.744.7916

<중요 범죄 발생시 해결 지원 및 신고 대처요령 홍보물 (2011년 11월 10일)>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성소수자 증오범죄 사례를 정리했다. 남성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및 성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편견에 기반하여, 충동적이면서, 피해자보다 스스로 우월하다고 보는 인식이 있으며, 가자해가 개인이 아닌 집단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건들이 언론에 보도되는 것은 기존의 범죄 사건의 유형이나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지만, 피해집단에 속성에 대한 증오, 혐오, 편견에서 비롯된 것인, 소수자에 대한 잘못된 인식에서 비롯된 사건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언론 보도의 중요성을 매체에서는 판단하고 있다. 더욱 고려해야 할 것은 이러한 증오범죄 사례가 언론에 보도된 사례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 하더라도 경찰에 자신의 정체성을 알려야 하는 문제와 경찰 수사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경찰관들의 혐오발언 등이나 수사의 신뢰성에 대한 문제로 신고를 기피 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문제이다. 2014년 국가인권위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시대조사’에 따르면, 성소수자들은 경찰의 조사과정에서 ‘모욕적인 발언’, 피해를 믿지 않거나 축소함, ‘조사과정에서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정체성을 가족이나 주변인에게 알림’, ‘아무 이유 없이 범죄자로 의심 받음’, ‘피해를 당했을 때 성, 정체성을 약점 잡아 가해자와 합’ 등의 부당한 대우나 조치를 받은 경험으로 인해 경찰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음을 알 수 있었다.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의식과 증오범죄 발생 시 즉각적인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4. 성소수자 증오범죄의 해악<sup>4 5</sup>

##### 1) 피해자 개인

증오범죄의 피해자들은 다른 범죄 피해자들보다 높은 정도의 취약성을 나 (vulnerability) 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자들은 신체적 피해의 정도와 상관없이 극도의 정신적 모욕감을 경험한다 그 후유증으로 피해자들은 우울증 침잠 불안 무력감 고립감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겪게 되는데 이는 강간 피해자들과 비견된다고 한다. 이는 성소수자 증오범죄에도 적용된다. 제1회 인천 퀴어문화축제의 성소수자 참가자들은 당시 현장에서 혐오/차별 선동세력의 폭언과 폭력을 통해 심한 정신적, 신체적 폭력을 경험했다고 밝혔다.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연구팀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수의 70%가 우울증상, 84%가 급성스트레스장애, 66%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호소하였다고 한다.

피해자는 자신을 피해자로 만든 그 특성을 바꿀 수 없으므로 또 다시 공격당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게 되고 낙인찍기를 통해 사회적으로 자신이 실패할 것이라는 예상을 영구적으로 보유하게 된다. 낙인찍기는 폭력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에도 낮은 자긍심을 유발하지만 폭력을 동반한

---

<sup>4</sup> F. M. Lawrence, The Punishment of Hate: Toward a Normative Theory of Bias-Motivated Crimes, Michigan Law Review, The George Washington University Law School, 1994, 9쪽

<sup>5</sup> 혐오범죄 관련법의 제도화 가능성과 의미,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오가람, 2010,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32쪽

경우 그 심각성은 더욱 커진다.

## (2) 표적 집단에 대한 영향

혐오범죄는 피해자 개인에게만 피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표적 집단 전체에 대해 피해를 유발한다. 자신이 속한 집단의 구성원 중 누군가가 ‘호모’ 등의 혐오 섞인 폭력적인 발언을 들었을 때, 자기 자신이 피해를 경험한 것과 같다고 느끼고 인식하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증오범죄는 피해가 피해자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표적집단에 걸쳐 영향을 미치게 하고 불안 공포 분노를 촉발시킴으로써 가해자가 속해 있다고 여겨지는 집단에 대한 공격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집단 간의 지속적인 긴장관계를 형성하게 한다. 이러한 점 때문에 증오범죄가 다른 범죄와 구별되고 증오범죄가 다른 범죄에 비해 더 큰 사회적 위해를 가한다고 본다.

## 5. 나가며

### 1) 성소수자 인권침해 구제 제도의 필요성

2014년 발표된 한국LGBTI 사회적 욕구조사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성소수자는 직장, 혈연가족과 친족 등 차별과 폭력으로 안전하지 못한 공간이라고 느낀다. 어린 연령에서 차별이나 폭력의 경험이 더 두드러지고, 커밍아웃을 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많다. 동성애자와 양성애자일 경우 무작위 대중에게 정체성을 공개한 후 차별과 폭력의 경험이 월등히 높다. 트랜스젠더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알리지 않았더라도 외향 상 드러난 경우 차별과 폭력에 노출되기 쉽다. 하지만 많은 경우 차별이나 폭력을 직접 경험하고도 신고하지 않는다. 조사 응답자 중 5.1%만이 경찰이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신고하였다고 말한다. 어린 연령에서 차별이나 폭력의 경험이 많은데 비해, 신고율은 오히려 더 낮다.

이러한 실태와 구조는 여러 가지를 시사해준다. 성소수자 인권침해에 대한 지원 및 구제에 대한 제도적 현실이 미약한 상황에서 성소수자 증오범죄에 대해 국가기관의 대책 및 대응에 대해 신뢰도가 높을 수 없다. 성소수자들은 같은 조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과 성소수자 인권침해 차별에 대한 구제절차나 기구 등을 중요한 정책 과제로 요청한다.

### 2) 인간 존엄성, 보편적 인권의 가치를 위해

성소수자 증오범죄는 피해 당사자, 해당 표적집단을 넘어서 전체 사회의 가치에 악영향을 미친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그들의 특성으로 인해 피해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짐으로써 그 주위로부터 피해의 가능성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한 심리에 의해, 누적적인 고립 상태에 놓이게 되어 사회적 단절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시민들이 공유하는 평등이나 조화의 가치를 해함으로써 전

체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sup>6</sup> 이러한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공유하고 있는 보편적 인권의 가치,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는 것에 대한 조화를 해칠 수 있다. 이처럼 명백하게 한 집단을 표적으로 이 집단이 지닌 특성으로 인해 폭력을 행사하는 현실이 존재하는 하는데 국가는 어떻게 인간의 존엄을 말하고, 포용을 말할 수 있는지의 문제를 다시금 생각해봐야 할 것이다.

---

<sup>6</sup> 혐오범죄 관련법의 제도화 가능성과 의미, <차별금지에서 혐오범죄가 갖는 의미>, 오가람, 2010, 올바른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쟁점포럼, 32쪽

## 발 제 4.

# 증오범죄와 그에 대한 대응

| 류민희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천퀴어문화축제 법률지원단 변호사)

## 1. 들어가며

이 글에서는 먼저 2018년 9월 8일 제 1회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집회의 자유 침해와 증오범죄 피해를 돌아보고자 한다.<sup>7</sup> 이 날 증오범죄의 피해를 입고 성소수자 혐오에 노출된 행사 참가자들과 성소수자 집단의 정신건강 상의 피해를 살펴보면 ‘심각한’ 수준이라는 표현도 가볍게 느껴질 정도다.<sup>8</sup> 하지만 이 모든 일은 ‘막을 수 있었던’ 인권 침해였다.

우리 모두 아직 상처가 덜 아물었지만 이제 피해와 집단 공포를 넘어 오늘 여기서 서로를 돌아보고 각자의 경험을 공유하며 현실을 고발하고자 한다. 우리는 고립된 혼자가 아니다. 이 이야기는 좀 더 전해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경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은 소수자에 대한 차별, 배제, 폭력, 범죄를 방지하고 예방할 의무가 있다. 오늘의 대화가 차별과 혐오에 대한 근본적 대책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피해자들의 치유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 2. 한국의 퀴어문화축제

퀴어문화축제 혹은 자긍심(Pride) 행사는 성소수자 뿐만 아니라 지지자와 시민들이 함께 하는 행사다. 특히 아시아에서는 그 사회의 다양성을 축복하는 사회적 대화의 의미도 강하다. 일본의 도쿄 레인보우 프라이드, 싱가포르의 핑크닷(Pink Dot), 대만의 타이페이 프라이드 등 아시아 국가의 수도에서 개최되는 자긍심 행사는 이미 그 나라의 주요 행사가 되었다.



### 2018 타이페이 프라이드를 축하하는 대만 문화부의 트윗

2000년 서울에서 처음 열린 한국의 퀴어문화축제는 이제 서울퀴어문화축제는 20회를 맞아 수 만

<sup>7</sup> 글쓴이 또한 현장에 있었고 깃대를 부러뜨리려는 반대자의 습격으로 팔에 상해도 입었다.

<sup>8</sup> 자세한 피해 상황은 고려대학교 일반대학원 보건과학과 역학연구실의 <제1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참가자 폭력 피해 조사>에 드러나있다.



명이 참석하는 대형 행사가 되었고, 인천, 전주, 광주, 부산, 제주 등 한국의 주요 도시에도 퀴어문화축제가 열리고 있다. 한국의 퀴어문화축제는 인근 아시아 나라의 성소수자들 그리고 표현의 자유를 제한받는 나라의 성소수자들이 한국 관광을 위해 방문하는 행사가 되었다.<sup>9</sup>

2000년대 사회적 문화적 성소수자의 가시성과 사회적 인식도는 증가하고 있다. 성소수자 인권 의제, 법, 제도의 논의도 한창이다. 초기 수백명이 소박하게 모여 즐기던 퀴어문화축제는 대형 사회적 행사가 되었다. 그러던 2014년 신촌에서 열린 제 15회 서울퀴어문화축제에 반대자들은 동성애 혐오 피켓을 들고 도로에 누워서 퍼레이드와 집회를 방해하는 시도가 시작했다. 2015년에는 동성 집회신고를 통해 행사 개최를 법률적으로 저지하려는 시도도 있었다.<sup>10</sup> 그 해 서울과 대구의 경찰청

---

<sup>9</sup> 매년 대부분의 아시아 성소수자 자금심 행사를 방문하고 경험을 공유하는 것으로 유명한 일본인 나카무라 타카토시(Nakamura Takatoshi)씨도 이날 인천에서 반대자들의 폭력을 겪었고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의 게이 행정서사입니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을 지지합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그의 판넬도 반대자들의 습격으로 부러졌다. 그는 자신이 인천에서 겪은 일을 페이스북을 통해 일본 대중들에게 알렸다.

<sup>10</sup> 1. 반대자들이 오직 자금심 행사를 막거나 반대할 목적으로 먼저 집회를 신고하여 후신고 집회를 저지하는 경우, 2. 반대자들과의 충돌을 우려로 공권력이 자금심 행사를 금지하는 경우, 두 가지 모두 자금심 행사에 대한 대표적인 집회의 자유 침해이며, 오히려 반대자들에게 사실상 효과적인 ‘비토(veto)권’을 주게 되는 심각한 침해가 발생한다. 유럽평의회 CHAMBER OF LOCAL AUTHORITIES "Freedom of assembly and expression for lesbians, gays, bisexuals and transgendered persons" 보고서 중, 2006 모스크바 프라이드 퍼레이드에 대해 아래와 같은 내용이 보고되어 있다.

Moscow officials also cited concerns about violence when prohibiting the Pride parade in 2006 (claiming that they would be unable to provide security for the parade-goers). In addition, they argued that the parade would block traffic. Significant international pressure was brought to bear on the Moscow authorities to reverse the decision, but the ban was maintained (and upheld by a decision of Tverskoi district court on 26 May, see further below). The Pride organisers proposed an alternative – a picket on Lubyanka Square – but this too was prohibited (on the basis that ‘the picket could spark public resentment, given the requests to ban this public event laid down in numerous letters from government and parliamentary officials, religious confessions and individual citizens.’)

It is worth noting that if the declared aim of counter-demonstrators is to prevent the original demonstration from taking place, then the destruction of rights provisions (Article 17 ECHR and Article 5 ICCPR) will be engaged. 반대집회의 공표된 목적이 원집회를 막기 위한 것이었다면, 자유권규약 제5조 '권리를 파괴하기 위한 행위' 조항이 고려되어야 함. (제5조 "이 규약의 어떠한 규정도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 및 자유를 파괴하거나, 또는 이 규약에서 규정된 제한의 범위를

은 옥외집회금지통고처분을 내렸으나 법원은 모두 “집회의 금지는 원칙적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명백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는 것이고, 집회의 금지는 집회의 자유를 보다 적게 제한하는 다른 수단 즉 조건을 붙여 집회를 허용하는 가능성을 모두 소진한 후에 비로소 고려될 수 있는 최종적인 수단”임을 강조하면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이제 반대자들은 집회 선신고를 위해서 경찰서에서 줄을 서는 수준의 방해에 그치지 않는다. 구태여 법적 정당성도 없고 즉각 패배가 예상되는 가처분 신청도 하지 않는다. (그저 물리적 폭력으로 막으면 되는데 왜 법원에 가겠는가?)

2018년 인천에서 보듯이 폭력에 대한 책임은 제대로 추궁되지 않고 ‘정당한 민원’의 탈을 쓰고 사실상 폭력의 면책(impunity)을 받는다는 것을 깨달은 반대자들은 이제 거리낌없이 폭력과 범죄를 저지른다. 반대자들의 폭력은 소수자에 대한 가시성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한’ 사회적 논쟁의 범위를 넘어선 지 오래다.

### 3.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의 인권 침해

#### 가. 집회의 자유의 침해

일단 이날 행사에서는 경찰이 반대자들과의 ‘충돌’을 방지한다는 명목으로 인천퀴어문화축제 행렬을 오랫동안 고립시켰고 이 과정에서 참가자들은 모욕, 괴롭힘에 장시간 노출되었으며 경찰은 결국 좁은 퍼레이드 행렬에 대한 예상되었던 폭력적 습격도 막지 못하였다.

‘충돌’과 ‘불미스러운 사고’를 방지하고 집회 참가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 집회가 평화롭게 개최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책임은 경찰에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은 ‘누구든지 폭행, 협박, 그 밖의 방법으로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를 방해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는 평화적인 집회 또는 시위가 방해받을 염려가 있

---

넘어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것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를 행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지 아니한다.”)

While some jurisdictions might legitimately follow a ‘first-come, first-served’ approach to the issue of events notified to take place at the same time and in the same location groups opposed to Pride events should not be permitted to exploit this procedure if their objective is solely to prevent the enjoyment of the same rights by others. (어느 국가들은 동일시간장소의 집회에 대해 선착순 규정을 가지고 있지만, 자금심 행사를 막기 위한 자들에게 이 규정이 악용되어서는 안된다)

다고 인정되면 관할 경찰관서에 그 사실을 알려 보호를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관할 경찰관서의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 요청을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동법 제 3 조).

유럽 평의회 산하기구인 베니스 위원회의 「집회 시위의 자유에 대한 가이드라인은 “집회 관련 경찰작용은 적법성, 필요성, 비례성 그리고 반차별의 인권원칙에 따라 이루어져 하며, 적용되는 인권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특히, 국가는 참가자들이 물리적 폭력을 두려워하지 않는 평화로운 집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적극적 의무가 있다. 법집행 공무원은 나아가 (공작원과 반대집회 참가자를 비롯하여) 어떠한 방법으로든 집회에 대한 방해 또는 저해를 시도하는 사람 또는 단체로부터 평화로운 집회의 참가자들을 보호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sup>11</sup>

또한 마이나 키아이 유엔 집회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은 보고서를 통하여,

“집회를 개최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소수자 그룹에 대한 대중적 반감의 있는 곳에서는, 당국의 의무는 충분한 경찰 자원을 배치하는 것 이상이다; 잠재적인 법 위반자에 대한 공개 성명과 경고를 통해서 관용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유럽인권재판소의 *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사건에서 *Identoba* 와 *Others v. Georgia* 에서 조지아의 성소수자 커뮤니티 구성원들은 국제성소수자혐오반대의날(IDAHOT day)를 기념하는 평화 시위 중에 대규모의 반대 시위자 그룹에 의해 모욕과 위협을 당하고 폭행까지 당했다. 경찰은 가장 공격적인 반대 시위자들을 제지하기보다 경찰은 단지 자신들의 보호를 위해 반대자 중 일부를 잠시 구금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집회의 자유와 차별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권리의 침해라고 판단했다.

재판소는:

조지아 사회의 일부에서 성적 소수자에 대한 태도를 감안할 때, 당국은 신청 단체의 거리 행진과 관련된 긴장의 위험을 알고 있거나 알고 있었어야 했다 ... 따라서 그들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할 의무가 있었고, 예를 들어 잠재적 법위반자에게 가능한 제재의 본질을 경고하는 것 뿐만 아니라, 시위에 앞서 전혀 모호하지 않게 관용적이고 회복적인 입장을 표방하는 공개 성명을 발표할 수도 있었다. 게다가 성소수자 퍼레이드를 보았을 때 시위 현장에 파견된 경찰 경관의 수는 충분하지 않았으며, 퍼레이드의 충돌 가능성을 감안할 때, 당국이 폭동 진압반을 동원한다던지 더 많은 경찰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했을 것이다... 라고 보았다.<sup>12</sup>

---

<sup>11</sup> OSCE/ODIHR – Venice Commission Guidelines on Freedom of Peaceful Assembly para.5.3 참조.  
[http://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AD\(2010\)020-e](http://www.venice.coe.int/webforms/documents/default.aspx?pdffile=CDL-AD(2010)020-e)

<sup>12</sup> “Where there is a known history of public hostility towards a minority group that has announced an intention to stage an assembly, the duty of the authorities goes beyond deploying sufficient

인천퀴어문화축제를 통해 태어나서 처음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에 참가한 젊은 성소수자들은 자신의 공적 표현이 크게 거부받고 좌절되는 경험을 겪었다. 이 위축 효과를 어떻게 할 것인가. 표현, 집회, 결사를 통하여 소수자만의 자유롭고 안전한 공간과 다양한 표현을 만들 자유가 이렇게 침해당했다.

#### 나. 증오범죄와 차별로부터의 보호 실패

<제 1 회 인천퀴어문화축제 인권침해 실태조사><sup>13</sup>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2 명의 개인참가자와 10 개 단체 중 84.3%는 언어적 협박, 모욕, 괴롭힘, 73.5%는 무단 촬영 등 초상권 침해, 52.9%는 신체적 폭행에 대한 위협, 44.1%는 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의 피해를 입었다.

참가자들은 축제에서의 피해 이후 신체적 정신적 후유증을 겪었으며 참가자들이 속한 성소수자 집단에도 영향이 있었다. 현장의 그 수많은 채증 카메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부분의 가해자는 신원이 특정되지 않아 경찰의 수사망에서 벗어난 채 이 행위에 대한 면죄부를 받았다.

---

police resources; they should use all available means to advocate tolerance, such as through public statements and warnings to potential law-breakers. In *Identoba and Others v. Georgia*, for example, the applicants, members of the lesbian, gay, bisexual and transgender (LGBT) community in Georgia, had been insulted, threatened and assaulted by a larger group of counter-demonstrators during a peaceful demonstration to mark the 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Rather than restraining the most aggressive counter-demonstrators, the police had briefly detained some of the applicants, allegedly for their own protection. The ECtHR found a violation of the rights to freedom of assembly and to freedom from discrimination. It stated:

[G]iven the attitudes in parts of Georgian society towards the sexual minorities, the authorities knew or should have known of the risk of tensions associated with the applicant organisation's street march ... They were thus under an obligation to use any means possible, for instance by making public statements in advance of the demonstration to advocate, without any ambiguity, a tolerant, conciliatory stance as well as to warn potential law-breakers of the nature of possible sanctions. Furthermore, it was apparent from the outcome of the LGBT procession, that the number of police patrol officers dispatched to the scene of the demonstration was not sufficient, and it would have been only prudent if the domestic authorities, given the likelihood of street clashes, had ensured more police manpower by mobilising, for instance, a squad of anti-riot police."

<sup>13</sup> 정신건강에 대한 조사와는 별도의 인권침해 실태조사로서 2018. 10. 5.부터 10. 15.까지 진행되었다.

경찰을 비롯한 국가권력은 성소수자 자긍심 행사와 가시성이라는 계기적 사건에서 발생한 전형적인 ‘증오범죄’를 막지도 못하였고 수사와 처벌에도 실패했다. 그렇다고 피해자에 대한 지원을 한 것도 아니다. 차별과 폭력으로 인한 형사정책적 공중보건적 위기 상황에서 정부가 침묵하는 동안, 피해자들은 성소수자 커뮤니티 안에서 제공된 심리 상담 서비스<sup>14</sup>를 통하여 치유의 길을 찾았다. 이제 증오범죄는 어떠한 해악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대응해야 할 것인지 국가적 논의가 시급하다.

#### 4. 소수자, 혐오, 증오범죄

##### 가. 증오범죄의 정의

증오범죄<sup>15</sup>는 흔히 범죄학과 형사정책학에서 “인종, 피부색, 종교, 젠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등의 근거로 형성된 적대 혹은 편견이 동기가 된 범죄”라고 정의된다. 한국에서 증오범죄의 논의는 반차별운동과 함께 오래전부터 진행되었으나<sup>16</sup> 정책적 대응으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증오범죄는 두 가지 구성요소로서, 첫째, 형법상 비난가능성이 있는 위법행위(base offence)의 구성요건을 충족시키는 행위가 발생해야 한다. 이는 살인, 상해, 폭행, 손괴 등의 폭력행위일 수 있다. 둘째, ‘편견’이 동기로 작용하여 범죄가 일어나야 한다. 이것은 가해자가 대상이 지닌 ‘보호받는 특성’ 때문에 그러한 대상을 의도적으로 표적으로 선택했음을 의미한다. 이때 표적은 일정한 특성을 공유하는 집단과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 또는 재산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호받는 특성이란 인종, 피부색, 종교, 젠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장애 등 하나의 집단이 공유하는 속성을 뜻한다.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발생한 상해, 폭행, 손괴 등은 다른 일반적인 범죄처럼 피해자 상대방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속한 집단을 대상으로 하고 그 집단에 대한 편견과 혐오가 중요 동기였다.

증오범죄의 핵심은 피해자가 속해 있다고 생각되는 집단의 성격에 대한 ‘미움과 혐오’(아니무스)에 있다. 바버라 페리는 “증오범죄는 오명이 부여되고 주변화된 집단에 가해지는 폭력과 위협이며, 주어진 사회질서의 위계구조가 불안정해질 때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의도를 가진 권력과 억압의 메커

---

14

15 “hate crime”이라는 단어는 1985년 미국 의회에 Conyers, Kenally, Briggs 의원이 혐오범죄통계(hate crime statistics)에 관한 법안을 제출하면서 선택한 단어로부터 기원하여 지금까지 통용되고 있다. “bias crime”, “bias motivated violence” 라는 단어는 다른 의미로 혹은 상호 대체적으로 쓰이기도 한다.

16 오가람, 혐오범죄 관련법의 제도화 가능성과 의미, 2010.

니즘이다. 증오범죄는 실제로건 상상으로건 가해집단의 흔들리는 헤게모니와, 피해집단에 어울린다고 생각되는 종속적 정체성을 동시에 재창조하려는 시도이자, 자아와 타자 간의 '적절한' 상대적 지위를 재설정하여 양자를 확실히 구분하려는 수단인 셈이다.”<sup>17</sup>

#### 나. 증오범죄의 영향

증오범죄는 네 가지 측면에서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한다.

첫째, 개인적 측면에서는 증오범죄는 피해자가 지니는 정체성을 범죄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일반적인 범죄보다 더 큰 위해를 초래한다. 피해자가 공유하는 집단적 특성은 자신이 선택한 것이 아니라 불변적이거나 바꾸기 어렵다. 이런 점에서 범죄의 피해자는 이러한 정체성을 갖고 있는 한 언제든지 다시 범죄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범죄에 노출된 취약한 존재라고 여길 수 있다. 둘째, 표적집단적 측면이다. 피해자와 같은 집단적 특성을 공유하는 공동체 구성원들은 자신도 증오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에 마치 자신이 피해 당사자였던 것처럼 공포와 위협을 느낄 수 있다. 또한 자신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범죄가 재발할 수 있다는 점에 불안을 경험하게 된다. 인천퀴어문화축제 현장의 피해자 뿐만 아니라 이 소식을 접한 성소수자 집단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받았다. 셋째, 사회 전체적 측면이다. 증오범죄는 일반적인 범죄보다 훨씬 넓은 범위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사회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증오범죄는 피해자가 속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사이의 갈등을 가져온다. 넷째, 사회 가치적 측면이다. 증오범죄는 모든 사회구성원의 평등한 존엄이라는 가치를 위반한다. 모든 사람은 완전한 인간적 존엄을 누리고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평등한 기회를 제공받을 권리를 지닌다. 우리 헌법상 기본권이자 원칙인 평등의 가치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실제적이고 상징적인 충격을 준다.

#### 다.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

최근 2016 년 강남역 살인사건, 이주민/난민 혐오 등 제노포비아, 성소수자 혐오 등 한국 사회에 위협한 징후는 농후하다. 그러나 이에 대한 형사정책적 대책은 현재 눈에 띄지 않는다.<sup>18</sup> 한국 정부

---

<sup>17</sup> Barbara Perry, Where do we go from here? Researching hate crime, Internet Journal of Criminology (IJC) 2003

<sup>18</sup> KBS, 국민은 찬성하는데..'혐오·차별 대책법' 줄줄이 철회, 왜?, 2019. 1. 17.자 보도

“[리포트] 혐오범죄 논란을 촉발시킨 강남역 살인사건. 당시 경찰은 혐오범죄에 대한 규정이 없다며 판단을 유보했습니다.

[한중섭/서울 서초경찰서 형사과장/2016년 : "제가 여성혐오범죄... 학술적인 부분도 있고 전문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저도 처음 접해보는 용어라..."]

는 ‘혐오’가 형사 범죄 양형에 참작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sup>19</sup> 이에 대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증오범죄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증오범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실체법상 별도의 증오범죄를 입법하는 방식과, 증오범죄를 가중처벌하는 방식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증오범죄에 대한 추가적인 처벌의 당위와 필요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는 일단 논외로 하고, 먼저 증오범죄에 대한 첫번째 대응으로 제대로 된 통계의 집계와 수사 인력에 대한 교육을 제안하고자 한다. 최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도 한국 정기 보고서 심사를 통해 아래와 같은 권고를 내렸다.<sup>20</sup>

#### 인종차별의 정의와 법제

5. 위원회는 한국이 위원회의 지난 권고(CERD/C/KOR/CO/15-16)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인종차별을 정의하고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마련하지 않은 데에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 위원회는 헌법 제 11 조 1 항과 차별의 특정한 측면에 대해 다루고 있는 현행법으로는 협약이 규정하고 서술한 모든 종류의 차별금지사유를 충분히 포괄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다. 위원회는 또한 형법에 인종차별적 동기를 가중요소로 규정하고 가중처벌 사유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 (제 1, 2 및 4 조)

6.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 1 조에 규정된 대로 모든 차별금지사유에 대한 직, 간접적인 인종차별에 대해 정의하고, 이를 금지하는 포괄적인 법을 신속하게 마련할 것을 권고한 지난 권고(CERD/C/KOR/15-16)를 반복한다. 위원회는 한국이 협약 제 4 조에 규정된 대로 인종차별적 동기를 형사 범죄의 가중요소로 고려하도록 형법을 개정할 것에 대한 지난 권고(CERD/C/KOR/CO/15-16) 또한 반복하여 다시 권고한다. 나아가 위원회는 인종차별에 기인한 범죄를 인종, 피부색, 민족, 출신국, 종교, 체류자격, 성 등의 지표로 분석하여, 서로 교차하는 다양한 형태의 차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통계 자료 수집 매커니즘을 갖출 것을 권고한다.

증오범죄에 대한 대응은 우리 사회가 이러한 범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사회적 메시지를 주어 증오범죄의 표출적 효과를 축소하고 보다 광범위한 범죄 억제 효과를 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범죄가 반드시 처벌된다는 인식을 형성하여 피해자의 사회에 대한 신뢰 회복에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속한 집단 구성원이 지닐 수 있는 잠재적 범죄 피해에 대한 불안을 줄여주어야 한다. 또한 형사사법체계가 소수자 집단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대하여 (반대자의 정당한 민원으로 인식하

---

이 사건 직후 혐오 범죄를 정의하고, 관련 통계를 수집해 대책을 마련하자는 법안이 발의됐는데, 열흘 만에 철회됐습니다.”

<sup>19</sup> 유엔 여러 조약기구 심사 중 한국 정부 입장

<sup>20</sup> CERD/C/KOR/CO/17-19

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인식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하지 않는 태도를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 5. 나가며

이제 차별과 혐오가 시대적 징후가 되었다. 한국 사회는 더 늦기 전에 대항하고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소수자가 차별받지 않을 권리의 보장을 위해 형사정책적 대응이 시급히 필요하다.

2019년 1월 18일 발간된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의 인권상황보고서<sup>21</sup>는 한국의 인권상황 중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부분에서 인천퀴어문화축제의 상황을 언급하며 2018년 한국의 인권상황 중 오점으로 기록하였다.

고착된 통로에서 내가 든 깃발을 빼앗고 내 팔을 때렸던 검은 티셔츠를 입고 마스크를 한 청년의 눈빛을 기억한다. ‘용역이냐’는 나의 질문에 그는 코웃음을 쳤다. 그 청년의 눈에 나는 존재해서는 안 될 성소수자 집단과 그 지지자에 속한 사람이었다. 차별과 혐오를 악의적으로 선동하고 조직화하는 사람들이 있는 한 안타깝게도 그 청년의 ‘거대한 착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더 확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의 맥두걸 위원은 “한국의 인종차별은 심각하며 국가적 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시사했다. 소수자에 대한 차별, 혐오, 폭력도 그러하다. 이 엄중한 실태를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형사정책적 대응은 필요하다. 그것이 국가가 인천에서 가져가야 할 교훈이자 최소한의 의무다.

끝.

## 참고문헌

OSCE/ODIHR, Hate Crime Laws: A Practical Guide, OSCE/ODIHR

김지혜,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관한 국제인권법 동향과 그 국내적 적용」, 《법조》 제61권 제11호, 2012.

오가람, 혐오범죄 관련법의 제도화 가능성과 의미, 2010.

조계원, 한국에서 증오범죄의 가능성과 규제 방안, 2017.

조효제, 차별의 종착점이 혐오범죄다, 한겨레, 2016. 6. 28.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증오범죄의 실태 및 대책에 관한 연구, 2011.

홍성수, 말이 칼이 될 때, 2018.

---

<sup>21</sup> <https://www.hrw.org/world-report/2019/country-chapters/south-korea>



## 집단화, 정치화 되는 혐오범죄 차별금지법 제정이 시급하다

| 장종인

(인천장애인차별철폐연대 사무국장 장종인)

## 1. 들어가며

2017년 서울시교육청의 강서구 특수학교 설립을 앞두고 지역 주민과 장애인 부모들 사이의 갈등이 폭발했다. 갈등이라고 했지만 사실 장애인 학교는 안된다는 지역 주민들의 완강한 반대 앞에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는 일방적 혐오와 차별의 현장이었다. 뉴스를 통해 부모들의 무릎 꿇고 눈물 흘리는 장면이 나가자 반응은 다양했다. 부모들에 대한 안타까움, 특수학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이기심에 대한 비판이 많았지만 “우리 집 앞에 특수학교가 생긴다면 반갑지 않을 것 같다”는 의견도 적지않았다.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말은 ‘나에게 이익이 될 때’만 적용되는 구호에 불과했고 장애인에 대한 근거없는 혐오와 차별은 아직도 공고하다는 좌절감을 맛본 사건이었다. 비장애인, 남성, 정규직, 이성애자 중심적인 한국사회에서 주류에 포함되지 못한 다양한 소수자들은 혐오와 차별, 그를 넘어 손쉬운 범죄의 대상이 되는 것이 현재 우리사회의 인권 현주소일 것이다. 10여년 장애인인권 운동을 한 나에게도 2018년 9월 8일 인천퀴어문화축제에서 벌어진 집단적 혐오범죄의 기억은 너무나도 강렬하게 남아있다. 휠체어를 밀치고 장애인들을 향한 저주에 가까운 폭언과 조롱을 퍼붓는 장면은 사실 지금까지 어떤 투쟁현장에서도 경험한 적이 없는 종류의 것이었다. 물론 버스나 전철을 점거하고 횡단보도를 점거해 도로가 막히기 시작하면 시민들로부터 욕설이 날라오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지만 혐오와 차별에 이골이 났다고 생각한 장애인 활동가들에게도 이날의 경험은 적지 않은 트라우마와 상처를 남겼다.

이러한 범죄행위는 이해가 다른 사회구성원간의 사회적 갈등과 충돌정도로 평가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단호한 규탄과 대안이 제시되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 2. 집단화, 조직화, 정치화 되어가는 성소수자 혐오와 범죄

인천퀴어를 통해 소수자 혐오, 특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는 보수기독교를 중심으로 집단화, 조직화, 정치화 되어가고 있다. 9월 8일 혐오세력의 범죄는 그 어느 때보다 집단화, 조직화되어있었다. 반대세력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광범위하게 조직되어있었고 관광버스, 교회버스를 통해 집단적으로 집회에 참여하고 모듬별로 모여 구호를 외치거나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특히 축제 진행을 방해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계획된 플랜과 동선에 맞춰 일사불란한 움직임을 보이며 반대집회 참가자들을 선동하거나 대열과 움직임을 지휘하고 경찰대응, 축제참가자들의 동선 파악과 사전차단, 행진차량 차단계획 등을 용의주도하게 펼쳐나가는 지도부와 행동대를 중심으로 조직적 테러가 자행되었다. 이는 이들이 단순히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넘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할 조직적 범죄단체화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들은 동구청장에 대한 정치적 압박을 통해 동인천광장에 대한 동구청의 사용불허를 이끌어냈으며 경찰의 개입을 최소화시키는 등 지역 정치세력을 이용하거나 결탁함으로써 혐오를 정치적으로 완성 또는 이용하려하였다. 이날 혐오세력의 주요 구호는 “동성애 반대”, “성평등 NO, 양성평등 YES”, “NAP 반대” 등이었는데 외면적으로 이는 동성애, 페미니즘, 보편적 인권에 반대하는 구호이지만 그 칼날이 정부의 인권포용적 정책을 향하고 있다는 데에서 이는 단순히 반인권적 혐오구호를 넘어 특정정치세력에 대한 공격의 의도가 분명해 보인다. 실제로 반동성애를 주장하는 블로그, 유튜브, 커뮤니티 등은 단순히 동성애 반대에서 멈추지 않고 박근혜 탄핵에 대한 반대 또는 음모론, 남북화해국면에 대한 냉전적 반대 등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에 대한 공격을 병행하고 있다.



인천퀴어축제 이후 진행된 인천인권조례 제정과정에서도 이들은 동성애, 난민 반대 등을 외치며 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했으며 그 결과 인천인권조례는 시장의 권한과 의무를 대폭 완화한 빈껍데기 조례라는 비판을 받게 되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혐오범죄가 가짜뉴스를 통해 광범위하게 유포되고 이를 통해 조직된 세력이 혐오범죄집단이 되고 이들이 다시 극우정치의 지지자들이 되는 과정이 현재진행 중이라는 점이다.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이용하여 민주정치, 진보정치에 대한 반대와 극우정치에 대한 지지를 규합해 나간다는 점에서 혐오세력의 범주는 단순한 범죄를 넘어 정치적 테러와 민주주의에 대한 전체주의적 공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성이 있다.

### 3. 혐오범죄에 맞서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자!

집단화, 조직화, 정치화되어가는 혐오범죄에 비해 이를 규제 대응하기 위한 대안은 지지부진한 것이 사실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운동은 수년째 답보상태에 빠져있다. 현 사태에 대해 차별금지법 제정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결사는 되지 않을지 모른다. 그러나 차별금지법 제정이 혐오범죄에 맞설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10년 전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장애인 인권이 제정 이전과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향상되고 있다는 것은 이 법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한계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유의미한 시사점을 던진다. 실제 2001년 국가인권위원회 출범 이후 인권위에 진정된 장애인차별사건 비율은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고용, 교육, 재화·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행정·참정권, 괴롭힘, 학대, 성폭력 등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피해자 구제, 차별시정은 물론 차별받지 않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제공해야할 의무 등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단순히 관념적으로 생각되어지던 장애인차별을 유형화하고 제도화하여 차별의 범위와 종류를 개념화하고 이에 대한 시정과 처벌, 구제를 법제화함으로써 장애인 인권향상에 기여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 차별사건 대비 장애차별사건 접수 현황(2001.11.~2016.12)

(단위 : 건, %)

구분			차별사유		
			계	성희롱, 나이, 신분, 학력 등	장애
총계	2001. 11.~ 2016. 12.	진정건수	23,413	12,440	10,973
		비율(%)	100.0	53.1	46.8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이전	2001. 11. 25.~ 2008. 4. 10.	진정건수	4,269	3,616	653
		비율(%)	100.0	84.7	15.3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2008. 4. 11.~ 2016. 12.	진정건수	19,141	8,824	10,320
		비율(%)	100.0	46.1	53.9

그러나 혐오와 차별은 단면적이지 않아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 역시 장애 그 자체에 대한 차별을 넘어 여성, 성소수자 등에 대한 이중, 삼중의 차별이 상존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가지고 있는 법적 규제력의 한계는 10년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장애인 인권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보여주고 있다. 때문에 장애인차별에 국한되지 않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차별금지법의 제정은 차별받는 특정 주체의 문제를 넘어 인권운동의 가장 시급한 화두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다. 혐오세력은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동성애 반대에 대한 표현의 자유가 침해되고 동성애교육을 통해 동성애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고 장애인인권 교육이 확산되어서 장애인이 늘어났다는 통계를 본적이 있는가? 인간의 정체성이 교육을 통해 확산되거나 통제될 수 있다는 믿음야말로 반인권적이며 근거없는 가짜뉴스에 불과하다. 혐오와 차별로 인해 고통받는 수많은 소수자들의 인권을 생각한다면 혐오는 표현의 자유가 아닌 범죄로 규정되어야 하며 이는 법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인천퀴어축제를 통해 혐오범죄의 심각성이 민낯을 드러낸 지금! 당장! 차별금지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 토 론 2.

**추지현**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는 그것을 (개인적/집단적 차원의) 표현의 자유라고 부른다. 온라인은 물론 학교, 집회와 시위 현장, 직장에서 넘쳐나는 혐오표현들을 어떻게 규제할 것인가를 두고 많은 사람들이 대항발화를 대안으로 이야기 해왔다. 바로 그 표현의 자유를 보장함으로써 더 많은 표현들이 공론장에서 경합하고 이를 통해 변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차별 시정에 소극적 의지를 가진 보수주의자들은 물론, 모든 시민이 자유롭게 참여해 여론을 형성하는 공론장이 민주주의의 핵심 영역될 수 있다고 믿는 이들, 혐오표현이 언제나 소수자들을 침묵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만은 아니며 오히려 규제를 통한 국가 권력 확장이 ‘불온한 것’으로 간주되는 소수자의 저항을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가진 이들도 그러했다. 그러나 인천퀴어문화축제의 현장은 그러한 대항발화의 조건, 표현의 자유가 차별적으로 보장되고 있는 현실을 여실히 보여준다.

그간 한국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소수자에 대한 혐오에 묵인하고, 또한 이들의 대항발화를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해왔다. 특히 퀴어문화축제에서는 참여자를 위협하는 행위는 반복되었으나 제지되지 않았고 집회 금지통고처분이나 장소 사용불허가가 내려지곤 했다. 하지만 인천 퀴어에서 목도한 혐오세력의 조직적 폭력은 전례 없다. 네 번째 발제자의 지적처럼 소수자에 대한 가시성이 부각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강한’ 사회적 갈등의 범위를 넘어섰다. 표현은 폭력과 즉각적 위협의 문제가 되었고 더 이상 시민 자치의 영역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불가능한 것은 물론이고, 두 번째 발제가 보여주듯 성소수자 집단에 끼치는 해악 역시 크다는 것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혐오범죄에 대한 별도의 형사법을 가진 나라들이 적어도 혐오나 폭력을 선동하는 행위를 범죄화 하고 있는 이유이다. 집단적 폭력이 난무하는 상황이 통제되지 못한, 많은 이유에 대한 사실 규명은 마찬가지로 상황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 문제를 진단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과정으로서 또한 현재의 상황을 공론화 하는 작업으로서 지속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떻게 공론화 해야 할 것인가? 세 번째 발제에서는 혐오범죄의 심각성, 그것의 영향을 사회적으로 알려 이 문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자고 제안한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바로 그 해악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상담 등 지역사회의 개입 필요성을 이야기 한다. 네 번째 발제에서는 국가가 관련 통계를 공표하고 그 밖의 형사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제안한다. 특히 통계 공표는 혐오에 기반한 범죄가 이 사회에서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것임을 공적으로 선언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크다. 모두 필요한 개입들이다. 여기에 덧붙여 본다.

형사정책적 대응과 관련하여 혐오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별도의 법제 도입의 필요성이 논의되곤 한다.<sup>22</sup> 하지만 인천퀴어에서 발생한 폭행, 재물손괴, 강제추행, 모욕은 현행법으로도 처벌 가능하고 또

---

<sup>22</sup> 영국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형사법을 통한 접근이 실제 가져온 효과와 관련해서는 1.실제 입건 및 처벌 빈도가 낮고 그것이 경미한 범죄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검거에 집중되는 점 2.상징적 측면의 효과 역시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 3.인종, 성적지향, 종교 등의 차이를 열거함으로써 유색인종이 백인을 상대로 한 폭력과 같이 그 권력의 위계, 소수집단의 취약성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 4.가해자의 고의를 확인하기

한 다중의 위력을 통한 범행, 비난할만한 범행 동기,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등의 양형인자를 통해서도 가중 처벌이 충분히 가능한 것이었다. 또한 형사처벌을 통한 개입은 어디까지나 사후적인 개입인데 반해 당시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첫 번째 발제에서도 나타나듯이 경찰이 행정상 즉시강제의 수단을 통해 급박한 행정상의 장애를 제거하지 않은데 있다. 때문에 참가자에 대한 일방적인 촬영이 이뤄지고 혐오세력은 해산되지 못했으며 참가자들이 이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초래되었다. 핵심은 법률이 제정된다 하더라도 그 실제 효과는 결국 법을 해석하고 집행하는 과정에 달려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성소수자에 대한 특별한 고려를 보충적으로 요구하는 형사법 제정 보다는 이성애, 시스젠더 중심적인 현재의 법 집행과 법적 판단이 어떻게 시민을 상이한 방식으로 대하고 있는지, 그 모순된 작동 방식을 드러내고 비판하는 전략이 더욱 필요해 보인다. 왜 경찰은 이 상황에서 폭력 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입건이나 제지를 하지 않으면서 유성기업 노조원의 집단폭행, 대법원 시위자의 화염병 테러에 대하여는 경찰권 발동의 기준을 재검토하여 재발을 막겠다고 나서는가? 왜 후자에 있어서는 ‘공권력 무력화’가 논의되지만 전자는 그렇지 않은가? 이것은 후자의 폭력 행위를 옹호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가 누구를 보호하려 하는가, 누구를 보호가치 있는 시민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질문이다. 혐오세력은 자신들이 피해자라며 마찬가지로 경찰을 비난하고 있다. 이때야 말로 경찰이 법 집행의 기본 원칙을 분명히 천명할 때이다.

둘째, 그러한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사회적 압력은 어떻게 행사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 ‘양성평등 Yes, 성평등 No’라는 구호는 동인천역에서 뿐만 아니라 여성폭력방지기본법이 제정되는 과정, 국회에서도 작동했다. ‘젠더 폭력’ 예방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에 있어 그것이 ‘동성애’로 지칭되는 성소수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 이것을 보호, 지원하고 예방 교육하는 정책을 포괄하게 될 것을 우려한 이들과의 협상의 결과였다. (이 법이 젠더기반폭력의 관점에서 정의되었다면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 범죄와 관련하여서도 통계구축, 실태조사, 피해자로서의 권리와 지원, 형사절차에서의 2차 피해 방지 의무 등이 고려될 수 있었을 것이다) 국회, 제도정치에서 성소수자들의 대표성이 반영될 수 있는 선거제도 개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경찰위원회, 인권위원회 등 법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기구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또한 이러한 필요성에 목소리를 내는 이들이 교육 현장에서조차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그 정당성의 근거가 될 차별금지법의 제정 움직임도 지속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를 통한 담론 확산의 필요성이다. 발제자들의 지적처럼 성소수자들이 경험하는 차별과 폭

---

어렵다는 점 5.정체성에 대한 식별을 강화함으로써 소수자 집단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편견을 영속화 한다는 점 6.역차별에 대한 주류 집단의 피해의식으로 인해 소수자에 대한 사회적 배제를 강화시키는 결과를 낳기도 한다는 점 7.징후인 혐오가 이면의 규범을 재해석하기 보다 차별의 현실의 사법의 문제로 축소시킨다는 점 8.미디어가 재현하는 피해자의 전형, 집단적인 극우 세력의 폭력에만 집중함으로써 일상적인 혐오에 대한 감수성 확장과 연동되지 못한다는 점 등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지적들이 필연적인 것은 아닐 것이다. 다만 (가중처벌법이든 보호지원법이든) 법제화 과정에서 수반될 수 있는 ‘피해자로서의 성소수자’라는 프레임이 가져오는 정치적 효과에 대한 고려는 필요해 보인다.

력의 영향, 심각성에 대한 연구는 한국에서도 진행되어 왔지만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다. 해외의 경우 단순히 성소수자를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것을 넘어 누군가를, 무언가를 범죄화 하고 처벌하고 훈육하는, 형사절차 전반에 작동하는 규범 자체를 드러내고 변화시키려는 범죄학 역시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피해자, 가해자로서의 성소수자는 물론 법 집행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성소수자들의 경험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어 왔으며 이를 토대로 캐나다, 잉글랜드와 웨일즈,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찰들은 성소수자 공동체와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 법 집행 과정에서의 행위 규칙과 교육 훈련 마련, 성소수자 연락관 배치 등을 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구체적 개입 방안을 제시하고 이슈를 발굴하는데 있어 한국의 연구 역시 필요한 상황이다. 인천퀴퍼 현장에 대한 기록, 보건학의 연구, 그리고 그것을 펼쳐 보이는 이 자리가 그러한 연구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



## **강문민서**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시정국장, 혐오차별대응기획단장)